

연구총서 00-09

•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김 성 철

통 일 연 구 원

요

약

본 연구는 베트남의 대외경제개방에 대해 분석한 후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다. 베트남의 대외의존적 경제는 북한의 자립경제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두 국가 모두 규모의 경제를 가지지 못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해외자본의 유입과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이 미국 및 아세안과 경제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과정과 해외자본을 유입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후, 국제정치적 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개방 방식과 효과 등을 전망하였다.

1. 베트남의 대외경제개방

베트남의 경제체제는 오랫동안 대외의존적 경향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베트남 통일 전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 의존했던 반면, 이후에는 아시아, 미국,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의존해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주목할 것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인 1986년 도이 모이 정책을 통해 개혁·개방을 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특히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권은 물론이고 자본주의권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베트남의 자본주의권에 대한 경제개방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는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문제와 미군실종자 및 유해송환문제를 둘러싸고 지속된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였다. 물론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의 기원은 베트남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경제제재는 미국의 인도차이나반도 전략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미국은 전략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과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막았다. 미국의 경제제재는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해 1994년 전면해제 됨으로써 30년에 걸친 적대관계가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를 계기로, 베트남은 ASEAN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FDI 확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개시,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의 ODA 지원 등 다양한 개방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대외경제개방의 확대로 베트남의 대내개혁은 보다 가속화되었다. FDI,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ODA 등 자본수입에 따른 경제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었다. 가격자유화, 재정과 금융의 분리, 국영기업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첫째, 가격자유화는 베트남 개혁정책 중 가장 선행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이었다. 가격자유화는 거시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자와 물가급등을 막는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재정 및 금융개혁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중요한 요구조건이다. 실제로 1993년 이후 재정, 금융, 외환정책의 정상화 합리화를 조건으로 3~5년의 중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베트남의 재정 및 금융개혁의 핵심은 먼저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세출면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융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분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데 있다.

셋째, 국영기업 개혁은 국제금융기구의 요구사항인 동시에 AFTA 참여에 따른 대내적 조치사항의 일환이다.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은 급진적 민영화를 추구한 동구에서와는 달리, 국영기업의 경영자출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리스트릭처링을 통해 만성적 적자상태인 국영기업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는 개방과 개혁 간에 밀접한 상승작용이 있었던 것이다. 이런 결과는 베트남 지도부의 실용주의적 인식과 함께 경제체계의 대외의존적 속성으로부터 크게 기인하였다.

2. 북한에 주는 함의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에서 베트남은 북한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대외경제개방 방식에 있어서 북한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 베트남은 대외의존적 경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이 북한이 일찍이 자립적 경제를 강화시켜 왔다는 점과 대조된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모두 지구적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모두 미국과 관계개선 없이 대외경제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베트남은 대미관계 현안인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비로소 해외 및 국제금융기구의 자본수입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북한은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준비단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북한 경제체계의 특성을 고려한 가운데 베트남 사례에서

추출할 수 있는 시사점으로서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방식을 전망해보기로 하자.

첫째, 북한은 대외개방이 대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개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 바, 이는 북한이 개혁·개방의 상호작용에 따른 연계효과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개방 방식을 택할 것임을 뜻한다.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오랫동안 자립적 경제체계를 유지해온데다, 구조적 개혁을 요구하는 국제금융기구 특히 IMF의 급진적 개혁요구를 수용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구들의 금융지원을 전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까닭에, 북한 지도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외경제개방 효과는 단기간 내에 성취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북한은 미국 및 일본 등 개별국가와의 현안문제 접근 및 국교정상화를 통해 보상 또는 ODA를 유인하는 대외개방 방식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민간차원의 FDI를 유인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ODA는 매우 유효한 자본수입의 원천이 될 것이다.

셋째,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체의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대외개방이 일단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점진적이거나 자본수입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은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은, 즉 개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는 점진적으로 가격자유화, 재정 및 금융의 분리, 공기업 개혁 등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의미한다.

요약하건대, 북한은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상 초기에는 베트남보다 대외경제개방의 심도와 속도가 훨씬 낮고 느리겠지만, 점차 개방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또는 개방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진적으

로 심도와 속도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혁과 개방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연계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며, 또한 실제로 개방의 효과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목 차

I. 서 론	1
II. 대외경제개방의 배경 및 여건	4
1. 대외의존적 경제체제	4
2. 외국인투자의 법제화	21
3. 인적자원 및 의식구조	26
III. 미국·베트남의 경제관계 발전	33
1.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33
2. 경제제재의 의도 변화	34
3. 미·베트남 경제협력 발전과정	40
IV. 아세안·베트남의 경제관계 발전	47
1. 관계개선 과정	47
2. 아세안 가입효과와 과제	53

V. 해외자본의 유입방식 및 유형	58
1.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58
2. 외국인직접투자	60
3. 공적개발원조	65
VI.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	67
1.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의 특징	67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78
VII. 결 론	86
참고문헌	88

표 목 차

<표 1> 국가예산에서 해외원조의 비율	6
<표 2> 베트남 통일후 수출입 추이	13
<표 3> 베트남 통일후 대소련 무역 현황	14
<표 4>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23
<표 5>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내 외국인기업의 세율	25
<표 6> 미·베트남 관계발전 추이	41
<표 7> 아시아 신흥국가의 투자 현황	42
<표 8> 주요 국가별·연도별 대베트남 투자추이	61
<표 9> 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	62
<표 10>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64

영 문 약 어

ADB	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
AFTA	ASEAN Free Trade Area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자유무역지대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BCC	Business Cooperation Contract 경영협력계약
BOT	Build Operate Transfer 건설-경영-양도
BT	Build Transfer 건설-양도
BTO	Build Transfer Operate 건설-양도-경영
CMEA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공산권] 상호경제원조협의회
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OECD] 개발원조위원회
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IDA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I. 서론

지난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북한 조명록 차수의 방미 및 미국 윌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북으로 한반도 이해당사국들의 북한에 대한 선의의 관심이 증대되었다. 이같은 변화과정에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과연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개혁·개방 노선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통제와 외부와의 단절을 유지한 채 선택적 대외개방만을 택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북한의 정책 선택에 있어서 지도부, 구체적으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의지와 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북한을 둘러싼 국제정치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북한의 개혁·개방 여부는 지도부의 의지와 정책뿐만 아니라 국제적 환경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환경이란 특히 미국 및 일본의 대북한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소를 의미한다.

본 보고서는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가능성과 방식에 대한 전망을 위해 베트남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시사점을 중국의 사례에서 찾은 연구들은 많이 있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 인접해 있다는 지정학적 요인에서 뿐만 아니라 북한 사회주의의 형성과 발전에 가장 의미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개방에 관한 한, 중국과 북한은 유사성만을 찾기에는 구조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경제의 규모에 있어서 북한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방대할 뿐만 아니라, 투쟁과 갈등의 공산당 역사 속에서도 노선을 달리하는 과벌이 생존해 있을

2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수 있었다는 고유의 역사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논할 때 중국 사례만을 인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베트남 사례는 북한의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다. 특히 규모에 있어서나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하다. 베트남은 1975년 통일 후 중앙집중식 사회주의 노선을 남부지역에 적용하였으나 비효율과 낙후성을 경험하였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경제제재로 심각한 경제침체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도이 모이 정책을 택하여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림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가입으로 역내 경제권에 편입되어 시장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미·베트남의 관계진전 및 경제제재 해제와 동남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개혁·개방이 만개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의 성공여부는 지도부의 의지는 물론 국제정치적 역학관계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당국간 경제협력은 물론이고 민간차원의 대북 투자가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정부관보인 페더럴 레지스터(Federal Register)를 통해 2000년 6월 19일부로 대북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이행조치를 발효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양국은 동년 10월 12일 조명록 차수의 방미시 공동성명을 발표해 적대상태에서 평화관계로의 전환을 기약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와 북·미 수교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국간 관계변화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또한 북·일 수교 및 경제관계의 진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본 보고서에서는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에 관한 분석을 통해 이것이 북한에 주는 함의를 찾아보고자 한다. 베트남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외개방과 관련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대외의존적 경제체계가 북한의 자립형 경제와 대조되기는 하지만, 국제정치적 관계 특히 대미관계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과 지원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유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트남과 달리 북한은 대내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대외개방을 통한 외부 자본도입이 대내개혁의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개혁과 개방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자본유인을 위해서는 대내 개혁이 요구되고 개혁의 성공은 자본도입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II. 대외경제개방의 배경 및 여건

1. 대외의존적 경제체제

가. 통일과 대소의존적 발전전략

호 치 민(胡志明)이 이끈 베트남 공산당은 1945년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이른바 '8월 혁명'을 통해 9월 2일 하노이에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의 독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군 무장해제를 위해 베트남 북부지역에 진군한 중국 국민당 군대가 이듬해 중·불협정에 의해 물러나고 그 공백을 프랑스가 메우려는 과정에서, 프랑스와 베트남은 1946년 11월 하이퐁 항에서의 무력충돌을 발단으로 전면전에 돌입하게 되었다. 1953년까지 8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베트남은 디엔 비엔 푸(Dien Bien Phu) 전투에서의 승리를 계기로 본격적인 사회주의 이행전략을 추진하게 되었다.¹⁾

먼저 호 치 민은 북부지역에서 1954년부터 1956년까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고, 이후 1960년대 말까지 농업협동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1961년부터 수 차례의 5개년 계획을 통해 사회주의 공업화를 시행하였는바, 다른 사회주의 체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공업에 역점을 둔 발전전략을 택하였다. 이러한 중공업 위주의 발전전략은 베트남전 기간 동안은 물론 1975년 베트남 통일 훨씬 이후인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베트남 경

1) 서재진 외 5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423~5.

제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²⁾

통일 후 베트남 사회주의 발전전략은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면서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1975년부터 1979년 상반기까지는 사회주의 통제정책 시기, 1979년 후반부터 1982년까지는 자유화 시기, 1982년부터 1984년까지는 재통제 시기, 1985년 이후는 재자유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1986년 이후 도이 모이 개혁·개방 추진을 위한 정책 실험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

물론 통일 베트남의 경제정책 실험과정은 성공이 아닌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 사회주의 공업화 특히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유지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1970년대 후반 베트남 당국은 북부 베트남 모델을 남부에 이식하려 하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⁴⁾ 낙관적 입장의 배경에는 남부 베트남 출신 간부들의 지지가 있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대외관계에 있어서 소련의 역할이었다. 즉, 소련과의 밀착, 소련 사회주의체제 모델에 대한 일체감이 없었다면, 중공업 중심의 전형적 사회주의 발전전략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존속시킬 수 없었으며 또한 이것을 남부에 강요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는 1980년대 중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집권하여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베

2) 박종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제개혁: 사회주의 발전전략으로부터 아시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5), p. 252.

3)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강태훈 외,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59~96.

4) 물론 여기서 말하는 북부 베트남 모델이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협동화 정책까지를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통일 후 남부에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를 추구하려는 정책은 높은 해외의존도와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때문에 그것의 성공을 초창기부터 보장할 수 없었고, 농업협동화는 남부지역 농민의 소극적인 참여로 당초 목표를 크게 밑돌았다. 예를 들어, 1980년까지 남부 농민의 9%만이 협동화되었을 뿐이다.

6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남도 중공업 중심의 발전전략을 버리고 개혁·개방 단계에 들어가게 된 데서 잘 드러난다.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실험과 중공업 발전전략은 구체적으로 자본과 기술의 소련의존에 의해 가능할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소련·베트남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전쟁 기간인 1965년~1975년 사이에는 국가예산의 절반 이상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원조에 의존하였다. 통합 후에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높은 비율의 국가예산이 외국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이한 경제체계가 있었음이 드러난다.

<표 1> 국가예산에서 해외원조의 비율

(단위: %)

연 도	국내 세입	해외원조(유상, 무상)
1960	77.6	22.4
1961	76.9	23.1
1962	74.1	25.9
1963	73.5	26.5
1964	78.5	21.5
1965	57.7	42.3
1966	39.0	61.0
1967	33.4	66.6

연 도	국내 세입	해외원조(유상, 무상)
1968	31.1	68.9
1969	31.5	68.5
1970	32.4	67.6
1971	36.0	64.0
1972	39.7	60.3
1973	40.1	59.9
1974	39.4	60.6
1975	45.1	54.9
1976	55.2	44.8
1977	65.5	34.5
1978	68.0	32.0
1979	59.2	40.8
1980	59.4	40.6

출처: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pp. 40 & 101.

통일 직후 추진된 제2차 5개년 경제계획(1976~1980) 기간동안 베트남 당국은 소련, 중국, 동구국가로부터의 경제원조는 물론이고, 서방국가와 세계은행, IMF, ADB로부터의 원조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

을 시도하였다. 1978년 베트남은 과거 남부 베트남(월남)이 가지고 있었던 IMF와 세계은행의 회원국 자격을 계승하여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조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이루어졌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베트남 전쟁 종결 직후 가뜩이나 패배의식에 잠긴 미국 및 서방국가들과 이들에 의해 주도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베트남의 전후복구 원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일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베트남의 대중국 및 대소련 외교관계가 상호 반비례했음을 엿볼 수 있다. 중국의 원조는 1975년부터 1978년 사이에 기복을 보였다. 1976년 이전까지 중국의 지원은 매년 유상 및 무상을 모두 포함하여 3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는 베트남이 소련과 중국 양대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비교적 균형적인 입장을 취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한족(漢族)의 우월주의를 소비니스트적 민족주의라고 못마땅 해오던 터인데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경쟁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통일 후 소련중심의 경제블록이라고 할 수 있는 CMEA(또는 COMECON)에 직접 가입하기보다는 하위기구인 국제투자은행(international Investment Bank)와 국제경제협력은행(International Bank for Economic Cooperation)에만 가입하였다.⁵⁾ 하지만 1977년 베트남·중국 양국간 외교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베트남의 대소련 경도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동년 11월 레 두안(Le Duan)이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중국 정부는 더 이상 베트남에게 원조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는 결국 1978년 5월 베트남에서 추진되던 22개의 프로젝트에 대한 원조를 철회하였

5) Gareth Porter,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 200.

고, 동년 7월 베트남에 대한 모든 원조를 중단하였다. 이에 대해 베트남은 중국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함과 동시에, CMEA 회원국들과 관계를 급진전시켰다. 1978년 6월 베트남은 제33차 CMEA 회의에서 공식 회원국이 됨으로써, 1950년대 이래 유지해온 경제협력 관계를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는바, 팜 반 동(Pham Van Dong) 총리는 베트남의 CMEA 가입으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⁶⁾

이상을 바탕으로 베트남·소련 및 CMEA 관계는 1978년 말에 들어서자 급진전되었다. 동년 11월 베트남과 소련은 향후 25년간 유효한 상호우호협력조약을 맺었으며 이에 근거해 6개의 경제, 기술·과학 관련 협정을 도출하였다. 당시 베트남으로서는 ‘사회주의건설’과 중국으로부터 ‘조국수호’라는 두 가지 국가적 과제를 지니고 있었는 바, 특히 상호우호협력조약을 통해 이들을 수행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상호우호조약을 통한 양국관계의 발전이 베트남에게 새로운 불행의 씨앗을 안겨주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베트남은 1978년 12월 캄보디아를 침공하여 폴 포트(Pol Pot)정권을 전복시켰으며, 이에 대해 중국은 1979년 2월 베트남 북부 접경지역을 공략하였다. 베트남은 소련과의 관계를 밀착시킨 대가로 중국으로부터 동남아시아 역내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극심한 견제를 받는 동시에, 캄보디아 침공에 따른 경제적·군사적 부담과 함께 미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소망이 무산되기에 이르렀다.

아무튼 제2차 5개년 경제계획 기간동안 소련의 원조 규모가 막대했던 것은 사실이다. 먼저 소련은 이 기간동안 94개에 이르는 프로젝

6)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pp. 98~9.

트를 추진하는데 경제 및 기술 지원을 했다. 1979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의 25%, 석탄의 89%, 금속절단기계의 61%가 소련 지원하의 시설에서 생산되었을 정도이다. 또한 1980년 7월에는 베트남 남단 대륙붕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및 개발에 관해 소련과 합의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송 베(Song Be) 지역의 5만 헥타르에 달하는 자연고무 생산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농업 기계화를 위한 트랙터 및 농업기기에 대한 소련의 지원이 뒤따랐다.

그리고 소련의 대베트남 경제지원은 무역에서도 나타났다. 1976~80년 동안 소련의 대베트남 수출액은 17억 1,330만 루블에 달한 반면 수입액은 6억 5,080만 루블에 불과하였다. 다시 말해, 이 기간동안 베트남은 소련에 대해 10억 6,250만 루블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베트남의 대외무역이 주로 CMEA 회원국들과 이루어졌으며 그 중에서 대소련 무역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베트남 무역적자의 가장 큰 원천은 소련과의 교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 정부는 베트남의 무역적자를 신용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전후 베트남 경제계획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베트남의 소련 및 CMEA 의존정책은 1980년대 들어서 더욱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우선 1980년대 초반 베트남 지도부는 소련과의 유대 강화를 강조하는 발언을 늘어놓았다. 레 두안(Le Duan)은 1982년 3월에 개최된 제5차 베트남 공산당대회에서 소련과의 연대와 협력이야말로 당과 국가의 외교정책의 초석이라고 말하였다. 이같은 발언은 그가 1963년 12월 베트남 공산당 제3기 9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후르시쵸프 노선을 수정주의라고 맹렬히 비난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논조였다.⁷⁾

7) Le Duan, *On Some Present International Problems*, 2nd ed. (Hanoi: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4), pp. 179~81.

이에 부응하여 1983년 10월 베트남과 소련 양국은 하노이에서 경제, 과학, 기술 협력을 위한 장기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여기에는 (1) 농업, 에너지, 운수, 통신, 체신사업 등 베트남 경제의 주요 산업을 위한 협력, (2) 기계, 금속, 화학, 전자제 산업 협력, (3) 문화, 교육, 의료 분야의 베트남 간부 훈련, (4) 베트남 과학, 기술 증진을 위한 기본 조건 배양, (5) 소련 경제를 감안한 가운데 소련의 지원 하의 수출 제조업 발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 동안 소련으로부터 막대한 유상 및 무상원조가 이루어졌는바, 일부는 베트남·소련 간 무역적자를 보존해주기 위한 차관으로, 또 다른 일부는 무이자 차관으로, 그리고 중국이 지원을 중단한 프로젝트를 종결시키기 위한 무상원조로 제공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150개의 건설 프로젝트를 베트남이 추진하는데 지원해 주었다.⁸⁾

베트남에게는 소련에 의해 주도되는 CMEA 역시 경제원조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1984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CMEA 정상회담에서 각국 지도자들은 CMEA 회원국들 사이의 균등한 경제발전을 가속화하고 특히 베트남, 쿠바, 몽고의 경제발전 수준을 동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CMEA는 베트남에 대해 저리(低利)의 장기발전 차관을 제공하였고, 과학 및 기술 지원을 주로 무상으로 공여하였으며, 장기 사회·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지원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베트남에 제공된 차관의 금리 수준이 1984년 당시 동구 국가들에 적용되었던 금리의 1/4수준에 불과할 정도였다는 점이다. 또한 베트남은 이같은 맥락에서 제3차 5개년 계획 기간(1981~85년) 동안에 CMEA로부터 과학·기술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1,750만 루블의 무상원조와 820만 루

8)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pp. 153~4.

블의 저리 차관을 받았다. 또한 베트남은 5,000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기술자를 CMEA 국가들에 연수를 보냈으며, CMEA 국가들로부터 1,500명의 전문가를 받아들여 자국의 프로젝트 연구에 공동 참여시켰다.⁹⁾

그러나 주목할 것은 베트남과 소련을 비롯한 CMEA 국가간의 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 강화는 ‘사회주의 산업화’라는 기치아래 주로 중공업에 치우쳐 있었다는 점이다. CMEA 회원국들은 통일 베트남의 남부지역에서 수많은 전력 플랜트와 송전 및 변전 시설의 건설을 지원하였으며, 석유 및 가스 개발, 기계공업, 전자산업, 화학공업, 교통 통신 등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같은 중공업 중심의 지원은 어떤 결정적인 결과를 산출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옳을 것이다. 이런 평가는 베트남 측에서는 물론이고 소련 측에서도 지배적이었다. 소련의 일부 전문가들은 CMEA 국가들로부터 베트남에 주어진 지원에 대해 비판적이었는바, 원조 제공국들은 프로젝트의 총량에만 관심을 가질 뿐 베트남이 매칭 펀드를 낼 수 없다거나 원료, 연료, 전기 등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지향적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¹⁰⁾

다시 말해, 소련 및 CMEA 회원국들은 자신들의 발전 모델인 중공업 우선주의의 입장에서 베트남을 지원하였을 뿐, 베트남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거나 수출 지향적 산업화를 통한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하는데는 무관심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의 통일 후 10여 년 동안 막대한 차관 또는 무상원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체제는 더욱 대외의존성 특히 대소의존성이 높아져갈 뿐이었다.

9) Ibid., p. 151.

10)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0, 1988), p. 23.

<표 2> 베트남 통일후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적자
1976	313	917	604
1977	456	1,142	686
1978	482	1,159	677
1979	420	1,198	778
1980	391	944	553
1981	399	1,120	721
1982	475	1,185	710
1983	588	1,310	722
1984	665	1,560	895
1985	746	1,590	844
1986	785	2,155	1,370
1987	880	2,191	1,311

출처: IM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December 19, 1980), p. 34; IMF,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May 18, 1982), p. 26; IMF, *Vietnam: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May 15, 1987), p. 25; IMF, *Vietnam: Recent Economic Developments* (May 11, 1988), p. 32.

대외의존적 경제체계의 성격은 무역부문에서도 두드러졌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베트남은 통일 후 수출이 점증하였으나 수입의 증가추세를 따라잡지 못하고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더욱이 무역적자의 추세는 1980년대 들어서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마저 보였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대외의존적 경향은 대소 무역적자 증가로 더욱 심해졌다. 제2차 및 제3차 5개년 계획이 진행 중이던 1976부터 1985년 사이에 베트남의 수입액과 수출액은 각각 5배와 4.4배 증가하였다. 내용 면에서 보자면, 베트남은 소련으로부터 국내 수요용의 원료, 연료, 중요 기자재 등 대부분을 들여왔으며, 이것들은 에너지, 엔지니어링, 화학, 건설, 교통, 통신 등 중요 산업분야의 생산능력을 창조해냈던 것이 사실이다.¹¹⁾ 이런 의미에서 소련과의 교역은 베트남이 이른바 ‘적대세력으로부터의 경제봉쇄’에도 버티나갈 수 있는 저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표 3> 베트남 통일후 대소련 무역 현황

(단위: 백만 루블)

	1976년	1981년	1982년	1983년	1984년	1985년
수출	63.6	167.2	206.5	234.9	257.9	280.8
수입	232.5	724.6	804.2	904.1	1,004.0	1,165.3
무역적자	168.9	557.4	597.7	669.2	746.1	884.5

출처: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p. 156.

11)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p. 156.

나. 대소의존으로부터의 과도적 전환

1980년대 중반들어 베트남 지도부내에서 경제체계의 대외의존성에 대한 자기비판이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즉, 베트남이 지나치게 소련 원조의 일방적 수혜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원조를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운용하여 많은 낭비를 가져왔다고 자성하였다. 이런 자기비판적 견해는 아이러니하게도 베트남 사회주의경제의 설계사라고 불릴만한 트루옹 친(Truong Chinh)에 의해 표명되었다. 그는 관료적 집중제와 국가 보조금제로 표현되는 경영체계 때문에 소련의 지원을 잘 활용하지 못했음을 후회하였다. 매년 수 억 루블을 사회적 소비, 국가보조금, 국영기업 손실보전에 낭비했으며, 또한 수 억 루블을 너무나 많은 수의 건설 프로젝트에 분산투자함으로써 집중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지도부의 실책을 인정했다.

1986년 8월에 개최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 회의는 1950년대 중반 북부지역의 토지개혁 실시이래 30년간 채택해온 사회주의 경제체계에 대한 심각한 자기비판과 함께 경제발전의 전략적 전환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되었다. 이 회의에서 트루옹 친은 수 십년 동안의 강경노선을 버리고 경제개혁의 주창자가 되었다. 그는 경제정책에서 수많은 오류가 있었음을 고백하고, 특히 베트남의 실정에 맞지 않은 대규모의 중공업에 치중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외국 원조에 의존하면서 관료적 통제에 의거한 국가보조금제를 오랜 기간동안 유지해온 것에 대해 자성하였다. 그는 또한 개혁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사활(死活)이 걸린 문제라고 주장하였다.¹²⁾

12) Nayan Chanda, "Back to Basics: Vietnam's leaders admit their policies have faile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3, 1986), pp. 108 & 110.

정치국 회의가 열린지 불과 몇 개월 후인 1986년 12월 제6차 당대회에서는 정치국 회의의 결정을 수용하여 경제발전의 전략적 전환을 선언함과 동시에, 당총비서로 개혁주의자인 구엔 반 린(Nguyen Van Linh)을 선출함으로써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당 지도부의 의지를 재천명하였다. 베트남 당국의 전략적 경제전환은 분명 소련에서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추구하고 있는 개혁정책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에 틀림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제6차 당대회에서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와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는 점이다. 당대회는 소련 및 CMEA 회원국들과의 국제적 분업을 바탕으로 대외경제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입규모에 상응하는 규모의 수출을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비사회주의 국가, 국제기구 및 민간기업들과 경제 및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베트남의 구엔 코 탁(Nguyen Co Thach) 외무부 장관은 국제적 분업과 협력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폐쇄정책을 취하는 것이 자살행위와 같다고 비유하였다. 그리고 그는 개방정책이 경제발전을 위해서 가장 절실한 과제라고 밝혔다.¹³⁾

그러나 이같은 당대회 결의가 곧바로 소련을 포함한 CMEA 회원국과의 협력과 원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오히려 소련을 위시한 사회주의권의 대베트남 지원은 당시까지만 해도 베트남 지도자들에게는 요긴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베트남 지도부는 이들과의 경제협력을 대외정책의 초석으로 여긴 가운데, 점차 비사회주의권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베트남이 아무리 대외경제관계의 다원화를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당장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13) *Nhan Dan* (January 1, 1989), Vo Nhan Tri, *Vietnam's Economic Policy*, p. 209에서 재인용.

권의 원조를 대체할 어떠한 외부의 지원이 약속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1987년 10월에 개최된 CMEA 43차 임시회의에서 소련 및 동구국가들과 베트남, 쿠바, 몽고 사이에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장기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¹⁴⁾ 이는 기본적으로 저발전 사회주의국가들의 수준을 소련 및 동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기존과 달랐는바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첫째로 대규모 원조는 수혜국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전까지 제공할 수 없으며, 둘째로 원조가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잠재성을 고려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로 중앙집중식 경제의 비효율성과 효과분산을 종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었다.

베트남과 CMEA 사이의 이같은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은 베트남 지도부는 물론이고 소련 지도부의 기존 원조방식의 비효율성과 낭비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던 것이었다. 이미 원조의 성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수혜국인 베트남으로서나 또는 지원국인 소련 및 여타 CMEA 회원국 입장에서 보다 치밀한 타당성 검토와 분석에 바탕한 집중적인 투자가 바람직하였던 것이다. 아무튼 새로운 협력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차원의 사회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는 국가간 협력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기업 또는 연합기업들 사이의 협력이었다. 물론 첫 번째의 국가간 협력이 주가 되었으며 이에 따라 장기 경제·기술 지원이 뒤따르게 되었다. 또한 두 번째의 기업간 협력도 구축되어 소련과 베트남의 합영기업, 연합기업 등이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두 번째 방식에 바탕한 소련·베트남의 합영

14) M. Tribugenko, "Cooperation between CMEA and Vietnam: Checking the Slow Down," *Far Eastern Affairs*, No. 4 (1988), pp. 25~9.

기업으로 대표적인 것은 ‘원유 및 가스 탐사·개발 협약’에 기초해 베트남 남부 대륙붕 개발을 위해 1987년에 세워진 베트남소브페트로(Vietsovpetro) 회사를 들 수 있다.

경제원조와 마찬가지로 무역부문에서 베트남의 소련과 여타 CMEA 국가들에의 의존적 경향은 도이 모이정책 추진 직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들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 남아 있었으며, 이들에 대한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예를 들어, 1985년과 1987년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무역적자는 55.3%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소련과 CMEA 회원국들로부터의 과도한 수입 때문이었다. 동시기에 대소련 무역적자의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낮기는 했지만 그것도 28.3%나 증가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거래 내용에 있어서도 여전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베트남은 소련에 대해 원료, 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과 의류, 신발 등 단순 임가공 품목을 수출한 반면, 원유, 목화, 철강, 비료, 비철금속 등을 수입하였으며 총수입 규모의 20%정도는 소련이 지원한 프로젝트에 필요한 기자재들이었다.¹⁵⁾

1980년대 후반 소련을 포함한 CMEA에 대한 베트남의 무역불균형과 무역적자는 이들 국가들로부터의 원조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졌을 것이다. 즉, 이들 국가들은 베트남에 대한 원조 삭감분을 대신 무역으로 돌림에 따라 베트남의 무역불균형과 적자가 심해졌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사회주의 대변혁 직전 소련과 CMEA 국가들의 경제적 여력이 베트남에 대한 원조를 종전의 규모로 유지하기란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베트남은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원을 무역을 통해

15) A. Yampolsky, "USSR-Vietnam: Improvement of Trade and Economic Ties," *Foreign Trade*, No. 5 (1988), pp. 5~8.

충당할 수밖에 없었으며, 따라서 무역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다.

한편, 베트남의 대내 개혁정책에 상응하는 대외경제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는 분명하였는데, 이는 새로 개정된 외국인투자법이 1987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1988년 1월부터 발효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 외국인투자법은 당시 동남아 국가를 통틀어 가장 자유주의적인 대외경제관련 법규라고 할 수 있었다.¹⁶⁾ 그러나 당시의 외국인투자법은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친 오늘날의 것과는 달리, 사회주의권과의 관계를 전제한 채 베트남의 사회주의적 잠재력을 보다 강화하려는 과도기적 개방관련 법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과도기적 의미는 외국인투자법 제정 당시 추구했던 주요 목표를 살펴보면 드러난다.

- 외국 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인하는 것으로서 특히 합영사업을 장려함.
- 선진 경영을 배우고 경제관료와 숙련노동자들을 훈련시킴.
- 국제분업의 틀, 특히 CMEA 안에서 베트남 경제의 잠재력과 역할을 강화함.
- 천연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함.
- 베트남내에서 가용한 원자재 및 천연자원을 동원한 노동집약적 생산에 바탕한 고용 확대를 꾀함.
- 수출과 외환획득을 증대시킴.
- 사회주의적 산업화를 위한 자본축적을 증대시킴.

말하자면, 서방국가의 베트남 투자가 곧바로 가시화될 수 없는 상

16) *The Economist* (December 12, 1987), p. 25.

황에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들은 물론 장차 서방권의 직접투자를 지향하는 포석을 담은 외국인투자법을 마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투자법이 비교적 전향적인 개방관련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방의 투자가 곧바로 뒤따르지 않은 이유는 캄보디아 문제의 미해결로 미국의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ASEAN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불안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이 베트남 지도부로 하여금 비사회주의권을 중심으로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다. 실제로 1980년대 말에 즈음해 베트남은 수입초과와 무역적자를 메꿀 새로운 방도를 모색하게 되었다. 수출규모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자원 확보를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과거 소련을 비롯한 CMEA의 원조체제 하에서는 베트남의 대외 수출창구는 극소수의 국영무역회사에 의해 독점되었으나, 1989년 베트남 당국은 수출창구를 자유화하는 조치를 취해 국영회사들 사이에 경쟁요소를 도입하였다.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으며, 경화결제를 통한 수출도 배가되었다. 물론 이같은 소득은 주로 원유와 쌀 수출에서 얻어졌다.

소련의 원조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베트남이 원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과거 소련과의 합영에 의해 석유 탐사·개발을 이미 추진해 놓았기 때문이다. 물론 원유 수출에 따른 소득이 경제원조를 대체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지만, 사회주의 대변혁에 따른 일부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다. 당시 상황에서 베트남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었으며, 석유 탐사·개발 프로젝트는 구소련이 베트남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된 셈이다. 한편, 쌀 수출은 1988년에는 전혀 없었으나, 가격자유화와 소유권 보장 정책과 함께 40여 개의 무역회사들간 경쟁 덕분에 1989년에는 3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하

었다. 이후 쌀 수출은 점차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주요 수출국이 되었다.¹⁷⁾

베트남은 이렇게 사회주의 대변혁에 즈음한 전환기에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 대한 의존적 경제체계에서 탈피하여 대외경제관계를 다변화하는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같은 노력은 다음 장에서 논하는 바와 같이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통한 미국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관계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변혁기에 베트남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신속하고도 민첩하게 적응해 나갔던 셈이다.

2. 외국인투자의 법제화

베트남은 도이 모이 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기 위해, 특히 대외경제개방의 중요한 여건인 외국인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는 등 직접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왔다. 먼저 외국인투자 관련 법규의 모법인 외국인투자법이 1987년 12월 제정되었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 형태, 투자보장, 외국인 기업의 권리와 의무, 베트남 외국인투자 관리기관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그후 1990년, 1992년, 1996년, 2000년 등 네 차례에 걸친 법개정 과정에서 타 동남아국가 보다 개방적인 동시에 외국인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주목할 것은 외국인투자법이 1996년 11월 3차 개정시 외국인투자자들의 발언권 강화를 허용하는 내용을 새롭게 참가하였다는 점이다.

17) David Dollar, "The Transformation of Vietnam's Economy: Sustaining Growth in the 21st Century," in Jennie I. Litvack and Dennis A. Rondinelli, eds., *Market Reform in Vietnam: Building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Westport, Connecticut: Quorum Books, 1999), p. 34.

즉, 외국인투자법은 만장일치의 승인을 요하는 대상 사안을 대폭 줄임으로써, 베트남 정부의 규제 역할을 줄이고 반대로 외국인 투자가의 자율성을 보다 확대시켜 주는 방식으로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과거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합작법인의 이사회는 1년에 최소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의 일반적인 결정은 전체 이사 2/3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1) 합작기업의 생산 및 업무계획, 예산, 자금차입, (2) 정관의 개정, (3) 이사회 의장, 사장, 부사장, 주요 간부 등의 임면과 교체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이것은 베트남측 합작 지분의 다소에 상관없이 합작기업의 운영에 베트남측 이사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외국투자자들의 합작투자를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최근의 외국인투자법은 사장, 제1부사장, 경리부장의 임면, 정관개정, 예산결산 승인 및 프로젝트 결산, 투자자본 차입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이사회의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외국인투자법과 다름이 없다. 하지만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출석 이사 과반수 표결만을 명시해 의사결정 과정의 유연성을 보장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 측면의 혜택일 것이다. 베트남의 현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직접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¹⁸⁾

가. 법인세 인센티브

일반 FDI인 경우에는 25%의 과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

18)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 Guide to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pp. 10~13.

러나 베트남 정부는 FDI를 장려하기 위해 법인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해 소득세를 감소시켜주고 있다.

<표 4> 법인세 인센티브 제도

세율	업 종	면세 및 감세 혜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기업에 모두 적용 · 자연, 경제, 사회적으로 척박한 지역의 인프라 건설 · 산악 및 오지의 투자 · 조립사업 · 투자특별장려 사업 · 생산품의 80% 이상 수출 ·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 생산원가 30% 이상의 지역노동력 및 원자재 적극 활용 · 사회경제적으로 척박한 지역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 임업, 수산업 생산과 공정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 500인 이상 고용 -생산품의 30% 이상 수출, 생산원가 30% 이상의 고부가가치 부품 및 원자재 사용 · 고부가가치의 기계, 전기·전자 부품 생산, 원자재 적극 활용 · 베트남 채취 광물의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또는 사업 개시부터 15년간 적용 · 이윤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면세, 추가 4년간 50% 감세 · 특히 조립, 산악·오지의 인프라 건설, 대규모의 투자특별장려 사업에는 8년간 면세 · 기타 투자특별장려 사업은 이윤발생 연도로부터 4년간 면세, 추가 4년간 50% 감세

24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합의

세율	업 종	면세 및 감세 혜택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중 1개 이상 충족 · 야금, 기초화학, 기계제조, 석유화학, 비료, 전자부품, 자동차 및 오토바이 부품생산 ·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의 운용 · 다년생 산업용 작물 경작 · 자연, 경제, 사회적으로 척박한 지역에의 투자(호텔 프로젝트 포함) · 프로젝트 종결시 재산을 무상으로 베트남에 이전 · 20% 과세율이 적용되는 프로젝트 중에서 이상의 요건 2개를 충족시킨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또는 사업 개시부터 15년간 적용 · 이윤 발생일로부터 2년간 면세, 추가 3년간 50% 감세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요건중 1개 이상 충족 · 생산품의 50% 이상 수출 · 500인 이상의 고용 · 선진고급 기술 사용 ·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 농업, 임업, 수산업 또는 가공 · 베트남 생산 원자재의 사용, 베트남 천연자원의 효율적 채취 및 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 또는 사업 개시로부터 10년간 적용 · 이윤 발생일로부터 1년간 면세, 추가 2년간 50% 감세

<표 5> 산업단지 및 수출가공구내 외국인기업의 세율

세율	업종	면세 및 감세 혜택
10%	· 하이테크 단지내 하이테크 산업 및 하이테크 서비스업	· 8년 면세
	· 산업단지내 인프라 프로젝트	· 4년 면세, 추가 4년간 50% 감세
	· 수출가공구내 제조업	· 4년 면세
	· 생산품의 80% 이상 수출하는 산업단지내 기업	· 2년 면세, 추가 2년간 50% 감세
15%	· 생산품 80% 이하 수출하는 산업단지내 기업	· 2년 면세 (생산품 50~80% 수출하는 기업은 추가 2년간 50% 감세)
	· 수출가공구내 서비스업	· 2년 면세
20%	·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 1년 면세

BOT, BTO, BT, 산업단지 내 인프라 건설 및 기타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어지는 우대세율은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까지 적용된다.

나. 법인세 반환 인센티브

배당된 이윤을 투자장려 프로젝트에 재투자할 경우, 3년 또는 그 이상 동안 50%(20% 세율 경우), 75%(15% 세율 경우), 100%(10%

세울 경우)를 반환해 줄 수 있다. 베트남 재무부는 법인세 반환 요청서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윤 재투자에 대한 세금반환을 심사·결정한다.

다.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외국인소유기업과 BCC의 원자재와 수출상품 가공용 수입자재에 대해서는 수출입법에 의거한 수입세 임시면제 기간동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외국인소유기업과 BCC의 외국인 당사자가 수입한 다음의 품목은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업의 고정자산으로서 기술생산 라인에 속하는 장비, 기계, 운송수단과 건설자재 등이다.

라. 수입세 면제

외국인소유기업, BCC의 외국인 당사자는 수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정자산으로서의 장비, 기계, 운송장비 등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품, 건설자재 등에 대해서도 수입면제의 혜택이 부여되고 있다.

3. 인적자원 및 의식구조

가. 풍부한 노동력, 부족한 숙련노동력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의 지속적 추진을 가능하게 했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풍부한 노동력을 들 수 있다. 물론 베트남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반영하는 법·제도상의 인센티브, 석유, 석탄, 석회석, 고무 등 풍부한 부존자원이 FDI와 ODA를 유인하는 요소였다. 그러나 제도적 및 물적 자원 이외의 인적요소(human factor)를 고려하지 않고는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의 성공을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베트남 인구는 7,500여 만 명이며, 이 중 18세부터 6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가 4천만 명에 이르고, 이 중에서 2천만 정도가 적극적 노동력(active labor force)으로 분류된다.¹⁹⁾ 이들 경제활동 인구가 주로 농촌지역에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노동력 부족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인다.²⁰⁾

베트남의 노동력은 질이 높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끈다. 주변 아세안 국가들도 풍부한 노동력을 지니고 있지만, 베트남처럼 문맹률이 낮고, 의욕이 강하며, 생산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에서는 초등학교 취학률이 90%를 넘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도 학습 열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베트남 노동력은 월평균 임금 약 50달러 정도의 임금을 요구하는바, 이것은 인접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²¹⁾

그러나 이는 베트남에 숙련노동력이 풍부하다는 뜻은 아니다. 문맹률은 낮지만 고등교육 진학률이 해당 적령기 인구의 10%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이유는 과학과 기술분야에 대한 지도부의 강조에도 불구하고 전문적 지식보다 출신성분 또는 당에 대한 충

19) 구엔 반 쑹옹(Nguyen Van Xuong) 주한 베트남 대사 인터뷰 (통일연구원 세미나, 2000. 2. 22).

20) 우리는 이를 한국전쟁 후 북한의 사정과 대비해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1950년대 후반 전후복구와 급속한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천리마운동 등 노력동원운동이 전개되었다. 당시 북한에서는 공업화에 의한 농촌인구의 도시흡수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전쟁으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특히 남성 인구의 절대 감소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었던 것이다.

21) 오인식, 「베트남의 투자환경분석과 기업진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7), pp. 118~9.

성도 등이 사회적 상승의 우선적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종전 이후 남북베트남 통합과정에서 남부의 많은 숙련노동력이 정치적 억압을 받거나 국외로 탈출한 까닭에 대체로 풍부한 노동력에도 불구하고 숙련노동자는 부족한 상태였다.²²⁾ 현재 산업체 근로자의 60% 정도가 새로운 근로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상태라고 한다. 공업화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고 숙련노동력의 수요가 증대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숙련노동력의 부족은 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발전에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고등교육 기회의 획기적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숙련공의 높은 임금체계를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²³⁾

요약하자면, 베트남은 낮은 임금과 양질의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춘 한편, 숙련노동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국가로 평가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나. 실용주의적 사고

베트남 지도부가 1980년대 후반 대대적인 개혁·개방에 나선 데에는 그들의 실용주의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베트남은 프랑스로부터 10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그리고 미국으로부터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지배를 받음으로써 서양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프랑스는 베트남 사회의 생활중심 단위인 혈연공동체 락을 해체하여 개인생활을 보장해 주었다. 이는 물론 전통사회를 파괴하고 프랑스식 근대적 중앙집중식 식민지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공동체주의에 바탕한 전통적 가치

22) 구성렬 외, 『베트남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5), p. 48.

23) 오인식, 『베트남의 투자환경과 기업진출』, pp. 128~9.

로부터 해방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개입도 베트남의 상업주의와 소비주의 등 자본주의 문화의 확산을 가져와 베트남인들의 사고 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문화의 확산은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학습효과를 낳기도 했지만, 베트남인들에게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사고가 정착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베트남 지도부는 자신의 체제에 대해 자본주의라고 부르든 또는 사회주의라고 부르든 국가와 국민이 부강해지고 풍요로워지는 체제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게 만들었다.

베트남의 실용주의 사고는 식민지배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다. 민족영웅으로 추대받는 호 치 민으로 대표되는 베트남 지도자들에게서 이미 나타난바 있다. 호 치 민은 1920년대 이미 풍부한 해외경험을 통해 실용주의적 사고를 터득하였다. 그는 1952년 10월 베트남 정부의 8개 정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외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보호를 제기하였는바,²⁴⁾ 이는 민족자결과 독립을 내세우면서도 적대적이지 않은 외국인과의 선린을 강조하는 베트남적 특유의 노선을 낳게 했는데, 베트남인들은 이를 ‘호 치 민 주의’라고 부른다. 이같은 개방적이고 실용주의적 호 치 민의 사고는 그를 민족 지도자로 추앙하는 베트남인들에게 교훈적으로 남게 되었다. 결국 베트남인들의 이같은 사고 덕분에 실용주의적인 도이모이 정책이 가능할 수 있었으며, 국민적 거부감없이 대외경제개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도부의 실용주의적 사고는 인물교체에서의 지혜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일단의 지도자들이 경제정책과 관련한 실정(失政)에 책임을 지는 경우, 결코 숙청을 하거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고 직책만을 그만두도록 하는 관례를 지키고 있다. 이런 인물교체 방식은 중요한 실

24) 김병로,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 남북나눔운동 편, 『통일된 베트남을 가다』 (서울: 남북나눔운동, 1997), p. 81.

용주의적 시사점을 지니고 있는 바, 현직에서 물러나도 체면을 손상하지 않고 신분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게 함으로써 실정에 책임있는 인물들을 언제나 용이하게 교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셈이 되기 때문이다.²⁵⁾ 만약 실정에 책임진 지도자가 숙청되어 매장된다면, 지도자들은 실정에 대해 책임지기 보다는 직책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권력갈등의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베트남 지도부는 실용주의적 인물교체를 통해 지도부내 급격한 권력투쟁과 정치적 동요 없이도 정책전환을 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베트남의 도이 모이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

다. 중간간부의 부적응

베트남의 도이 모이 과정에서 성공의 주요한 관건으로서 지도부의 명료한 목표의식과 함께 지도노선과 정책에 대한 중간관료들의 이행 여부를 들 수 있다. 즉, 체계의 수행능력을 좌우하는 것으로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사이, 즉 지도부와 중간간부 간의 이해관계 일치여부이다. 베트남에서는 사회주의체제 변화와 개혁·개방 과정에서 주인·대리인의 부정적 현상인 간부들의 일탈현상이 현상이 목격되고 있다.

주인·대리인 모델에서는, 주인이 실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대리인보다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관찰할 수 없으므로, 만일 대리인이 자기 이익극대화를 추구한다면 주인의 이익과 상충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인·대리인 모델은 이같은 제약조건에서 어떻게

25) 구성렬 외,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 p. 37.

하면 주인이 최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물음의 하나이다.²⁶⁾

사회주의 공고화 과정에서 또는 도이 모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중간간부로 하여금 정책목표에 충실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무형의 생산수단이 공유화되어 있어 주인은 대리인에 의한 충실한 업무수행을 주로 도덕적 규범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에서 중간간부들은 공무원의 신분을 지니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물적인 요소가 아닌 훈장과 칭호에 의존한다. 이같은 규범은 사회주의 이행과정에서는 적절한 수단이 될 지 모르지만, 체제의 동원적 성격이 강해지고 대중에 대한 통제와 강제 수준이 강화되면서 점차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대리인인 중간간부들은 정책목표의 충실한 수행보다는 대중과 영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는데 보다 큰 관심을 가지게 된다. 여기서 대리인의 이익 극대화는 하나의 일탈행위로서 그 전형은 부정부패인데, 개혁·개방이 추진되면서 경제문제와 관련한 간부들의 재량권과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부정부패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베트남에서도 부정부패의 발생은 예외가 아니다. 도이 모이 정책의 실시에 즈음하여 정치국원이던 레 둑 토(Le Duc Tho)가 내었던 신문기고를 참고해 보자.

우리에게 닥친 도전은 물질적 유혹, 부르조아 스타일, 또는 예쁜 여자 그리고 소비재 등이다. ... 이러한 도전은 혁명가의 자질과 윤리를 점차 흔들리게 하고 있다. 그것은 암암리에 우리의 힘을 파괴시키고 있다. ...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관료들과 당원들 사이

26) 권순만·김난도, “주인·대리인 모형,” 정용덕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1999), p. 82.

에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현상으로 부패, 뇌물수수, 밀수, 축재, 타락한 생활, 선물을 통한 공공연한 수뢰 등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곳, 어느 계층에서나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생산과 인민의 생활에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며 관료와 당을 타락시키고 인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고 있다.²⁷⁾

관료제가 중심이 된 사회주의에서 관료부패가 간부와 일반 대중간의 유리현상을 다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당 및 국가 권위의 침식을 가져옴에 틀림없다.²⁸⁾ 베트남에서는 서방의 발전된 학문을 수학한 간부들이 있고 현재 젊은 세대의 해외유학이 증가하므로 업무수행 능력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간간부의 부정부패는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다 광범위하게 만연되어 있어 당의 기강과 함께 국가의 통제력과 침투력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핵심간부들은 주요정책들에 대해 공정한 결정을 이루어내지만, 대민업무를 둘러싼 세부집행과정에서 중간간부들은 재량권을 등에 업고 자의적 집행 또는 뇌물수수 등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27) *Nhan Dan* (May 1986), Leslie Holmes,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1993), p. 6에서 재인용.

28)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76.

29) 윤덕룡, “베트남의 경제통합과 체제개혁,” 남북나눔운동 편, 「통일된 베트남을 가다」, pp. 102~3.

Ⅲ. 미국·베트남의 경제관계 발전

1. 경제제재의 주요 내용

1964년 북베트남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한 이래 1994년 2월 3일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제재의 전면해제를 발표하기까지 미국의 베트남 경제봉쇄는 31년 동안 지속되었다. 1975년 남베트남이 패망함으로써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는 북쪽지역에서 베트남 전지역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는 내용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³⁰⁾

첫째는 미국인의 대베트남 거래관계 금지와 미국제품의 대베트남 교역 금지로서, 이것은 재무부와 상무부가 관여한 무역 경제제재였다. 미국의 베트남 무역 경제제재는 1917년 제정한 대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근거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시민 및 영주권자, 미국내 거주인과 조직, 전세계적 미국조직의 지점과 하부조직 등은 거의 예외없이 베트남과 상거래는 물론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미국시민 또는 조직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베트남과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정책이었다.

무역 경제제재는 미국인 및 조직의 거래관계 뿐만 아니라 미국제품에 대한 대베트남 제재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부품이 10% 이상 사용된 최종재에 대해서도 경제제재가 적용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다국적 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들은 상품 생산과 마케팅에 있어서 이 같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30) 박번순,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삼성세계경제』 (1994년 3월), pp. 12~3.

둘째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히 베트남에 대한 ODA 공여에 대한 비토권을 통한 경제제재였다. 실제로 미국은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 IMF, ADB 등에서 베트남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하였는바, 그 영향력은 무역 경제제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제금융기구의 공적 자금은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데 사용되는데, 이에 대해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함으로써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하려는 베트남의 노력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사회간접자본 건설이 민간기업이나 소규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국제금융기관에서 미국의 비토권은 가히 위력을 가진 베트남 제재조치였다고 말할 수 있다.

2. 경제제재의 의도 변화

베트남 경제제재가 취해진 기간동안 이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세계정세와 국제관계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었으며, 또 경제제재의 내용과 점진적 해제에 따른 영향력도 변화하였다. 1964년 최초로 경제제재를 실시한 의도는 북베트남의 남베트남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1965년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북베트남은 적성국이 되었으며 따라서 대적성국교역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자 경제제재는 전국적 범위로 확대되었는바,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간주되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미국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제

미국은 유럽 국가들의 동의아래 베트남 경제제재를 유지시켜 나가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베트남의 관계개선 요구를 뿌리치고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고 베트남의 고립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³¹⁾ 다시 말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를 더욱 정당화시켜주는 한편 미국의 아시아 외교에 있어서 대중국 경도 현상을 부채질한 사건이었다.

여기에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의 변화는 베트남 경제제재의 또 다른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에 이르러 베트남은 미국과의 화해를 모색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대미협조 태도를 보이면서 관계개선을 열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베트남 경제제재를 통해 정치, 경제, 인도주의 등 복합적이고도 새로운 목표를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시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내세운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에서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³²⁾ 첫째는 정치적·전략적 조건으로서 캄캄만 기지의 소련 해군 철수, 캄보디아 및 라오스로부터의 베트남군 철수 등이었다. 둘째는 경제분야에서 개혁·개방정책 실시와 외국투자의 안전보장이었다. 셋째는 인도적 조건으로서 미군포로 및 실종자 문제의 해결, 약 25만 명의 양심수 석방, 국민의 기본권 인정 등이었다. 그런 가운데 베트남의 대미 화해정책은 1984년 12월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전략적 외교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가속도가 붙었다. 물론 주요 내용은 대미현안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것이었다.³³⁾

31) 권경희, “베트남·미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 1975~1995,” 『국제정치논총』, 36집 1호 (1996), 249~50.

32) Nguyen Van Canh, *Vietnam under Communism, 1975~1982*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3), pp. 264~5.

33) 이교덕,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합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pp. 38~9.

또한 베트남은 1986년 제6차 공산당대회를 기점으로 도이 모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는 베트남 공산화 이후 10년여 동안 추진해 온 통합정책이 비효율을 낳을 뿐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 이런 가운데 채택된 개혁·개방정책은 자본주의로의 편입을 위한 전주곡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³⁴⁾ 베트남 지도부는 외국자본의 유입이 개혁·개방의 필수요소라고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를 목표로 삼고 있었다.

한마디로, 19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베트남의 대내외 정책은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원조확보는 물론 자본주의와의 타협 속에서 체계의 생존을 모색하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과정에서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는 1960년대와 1970년대 적성국에 대한 봉쇄의 의미보다는 베트남을 자본주의체제로 편입시키고 미국의 전략적 및 경제적 이익과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도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경제제재의 의도 전환은 베트남의 대내외적 요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고려한 현실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베트남은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철군을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이로써 외국인 투자, 기술이전, 외국차관 등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순응적이지만은 않았다. 미국은 철수에 대한 국제적 입증 결여를 이유로 IMF의 베트남 경제복구 원조 제공에 제동을 걸고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베트남 금융지원을 봉쇄하였다.

미국의 의도는 점진적으로 실현되어 나갔다. 1989년 9월 드디어 베트남은 국제적 감독이 없는 상태이기는 했지만 자신의 군대를 확보

34) 이수훈, “베트남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0권 2호 (1994년 가을·겨울), pp. 123~6.

디아로부터 전면 철수하게 되었으며, 이제 미국은 캄보디아의 평화, 미군실종자 문제에 보다 집중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캄보디아 철군이라는 전략적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 1990년대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는 캄보디아의 평화정착과 실종 미군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도구로 활용되었다.

이같은 미국의 의도변화는 1991년 4월 베트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이른바 부시행정부의 로드 맵에 의해서 제시되었다. 이것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요 내용은 베트남 측이 캄보디아 문제와 실종자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각 단계별 약속을 이행한다면 미국도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완화한다는 것이었다. 베트남 정부는 미국이 제시한 로드 맵의 수락여부를 보류한 채 전쟁포로 및 실종자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하노이 주재 미국사무소 설치에만 동의하고, 이에 따라 무역 경제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곧 무산되었다. 이는 베트남이 캄보디아 평화협정과 관련하여 프놈펜 정부에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베트남 경제제재 조치는 유효한 채 남아있게 된 것이다. 실제 미국은 1991년 10월 세계은행과 IMF 연례회의에서 베트남에 차관을 제공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또 다시 무산시킨 바 있다.³⁵⁾

경제제재를 통한 베트남 압박정책은 1991년 10월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군 실종자 문제의 해결로 좁혀졌다. 또한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 노력은 급진전되었다. 미국은 이제 미군 실종자 문제에 베트남이 적극 협력한다면 2년 내에 외교관계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인의 베트남 여행 제한을 일부 해제하여 단체여행과 사업목적 여행을 허용하였다.

35) 권경희, “베트남·미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 pp. 258~9.

이후 1993년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베트남에 대해 미군유해의 추가 송환과 실종자 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보 및 기록 제공을 요구하는 등 인도주의적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았지만,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를 점차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는 미국이 유해 송환과 실종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제제재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베트남의 협력을 얻기 위해 무역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대안을 택하게 됨을 말한다. 1994년 2월 미 클린턴 대통령은 대베트남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1995년 8월 정식으로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다.

여기서 왜 미국이 베트남 경제제재를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마지막까지 활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의문으로 남는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제제재의 실효성 상실’이란 가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³⁶⁾ 즉, 미국이 경제제재를 해제한 것은 경제제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경제제재에 동의하지 않았고, 베트남은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로부터 투자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유치해내고 있었다. 따라서 미국 기업들로서는 아시아 기업들에게 베트남 시장을 빼앗기고 있다는 피해의식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런 상황에서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9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되는 베트남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미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또 1994년 1월에는 미국 상원은 클린턴 행정부가 경제제재를 해제하도록 권유하였고, 이에 고무된 행정부는 동년 2월 효력발생에 한계를 지닌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하였다.

36) 박변순,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p. 18.

요약하자면,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는 처음에는 적성국에 대한 봉쇄조치로 시작하여 점차 세계 전략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의 고리로 활용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1) 미국은 1960~70년대에는 베트남을 적성국가로 간주하고 봉쇄의 의미에서 경제제재를 취했다. (2) 그러나 미국은 1980년대 들어 베트남의 대미접근과 대내적 개혁·개방 정책에 대해 자본주의로의 편입과 함께 캄보디아 문제를 둘러싼 전략적 문제와 미군실종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리로서 경제제재를 활용하였다. (3) 1990년대 접어들어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미국의 경제제재 조치는 미군 실종자 확인과 유해송환이라는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집약되었다. 인도주의적 문제는 베트남 사회 내의 인권유린까지를 포함한 것으로서,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에 대한 통제, 노동권 억압, 강제 이주 등도 말한다.³⁷⁾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베트남 시장에 대한 타 자본주의 국가들의 진출에 초조해진 미국기업들의 이해와 당국자들의 판단이 적절히 수렴되어 경제제재를 전면 해제하기에 이른다. 다시 말해, 전략적 문제가 해결된 1990년대 초반에 즈음하여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는 그 실효성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교역제재 조치는 베트남에 대해 압박수단으로서 거의 영향력이 없었다. 단, 미국은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금융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빈번한 비토권 행사는 도덕적 차원에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힘들었다.

37) Raymond J. Ahearn and Robert G. Sutter, "Vietnam-U.S. Normalization: Considerations for 1993,"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March 23, 1993), p. 6.

3. 미·베트남 경제협력 발전과정

부시 행정부 말기인 1992년 미국은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예비적 단계로서 몇 가지 조치들을 취했다. 미 행정부가 양국간 통신재개를 허용하자, 동년 4월 AT&T회사가 가장 먼저 통신사업에 참여하였다. 또 인도적 차원의 잉여농산물 및 식품·의약품의 판매 및 비영리 비정부기구 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인도적 거래를 경제제재에서 제외하는 완화책을 발표하였다. 7월에는 베트남에 서적 수출이 허용되었고, 제약회사가 호치민 의약대학과 합작 생산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2월에는 베트남 경제제재 제1차 완화 조치가 취해졌으나, 미국 기업의 베트남 사무소 설치 및 현지인 고용,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계약 체결을 허용하는 전향적 정책이었다.³⁸⁾ 이상과 같은 경제제재 완화 조치는 미·베트남의 현안 문제 중 미국의 인도차이나반도 전략과 관련된 캄보디아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가능하였다.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8월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금융지원 재개를 허용하였고, 동년 9월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베트남내 프로젝트 입찰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게 하는 경제제재 제2차 완화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는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실현되고 있다는 판단과 함께 아시아 국가들의 베트남 시장의 선점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였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서 1994년 2월 미국은 이전까지 적성국으로서의 베트남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전면 해제함으로써 미·베트남간 경제협력은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

38) 박번순,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p. 17.

<표 6> 미·베트남 관계발전 추이

1975. 4	베트남 공산화로 미·베트남 국교단절
1991. 4	미국,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위한 로드 맵 제시
1991.11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교섭개시
1992.12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 1차 해제
1993. 8	미국,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금융지원 재개 허용
1993. 9	미국, 대베트남 경제제재 2차 해제
1994. 1	미국 상원,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촉구 결의안 통과
1994. 2	미국 클린턴대통령, 대베트남 경제제재 전면해제 발표
1995. 7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발표
1995. 8	미·베트남 국교정상화 조인
1996. 5	미·베트남 무역협정 협의 개시
1997. 5	피터슨(Douglas Peterson) 주베트남 초대 미국대사 취임
1998. 3	미국 클린턴대통령, 잭슨·배닉(Jackson-Vanik)조항 적용면제 부여 (98. 7. 3~99. 7. 2)
1999. 6	미국 클린턴대통령, 잭슨·배닉조항 적용면제 1년 연장 부여
1999. 7	미·베트남 무역협정 원칙적 합의
2000. 7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표 7> 아시아 신흥국가의 투자 현황

(1994. 12. 24 기준)

국 가	프로젝트 수	자본금(백만 달러)
대 만	179	1,964
홍 콩	171	1,788
싱가포르	76	1,070
한 국	97	884

출처: *The Vietnam Business Journal*, 30: 1 (January/February, 1995), p. 9, William S. Turley, "Vietnamese Security in Domestic and Regional Focus: The Political-Economic Nexus," in Sheldon Simon and Richard Ellings, ed., *Southeast Asian Security in the New Millennium* (Armonk, New York: M. E. Sharpe, 1996)에서 재인용.

실제로 경제제재 전면해제 조치가 단행된 직후인 1994년 말 당시 대만, 홍콩, 싱가포르,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베트남 투자는 증가일로에 있었다. 이들 국가의 기업은 지리적인 근접성, 국내 인건비 상승, 대만 등 화교인맥의 활약으로 활발한 투자를 시도하였다. (표 7 참조)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 기업의 기회상실은 사실로 여겨졌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경제제재 전면해제 직전에 약 34개의 미국 기업들이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기는 했지만, 자동차 사업과 같이 유럽, 일본 등 여타 선진국들과 경쟁체제에 있는 기업가들은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

오랜 기간 동안 미국과의 경제협력 및 관계 정상화를 요구했던 베트남으로서도 미국 기업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다. 베트남은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기업의 진출이 곧 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주요

프로젝트의 입찰에 미국기업의 지분을 일정부분 남겨 놓았다. 예를 들어, 베트남이 청룡유전 개발권을 외국의 석유회사에 넘길 때 미국의 모빌사(Mobile)의 지분을 유보한 사실이다. 이는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는 해당 미국 기업이 행정부에 베트남 경제제재를 해제하도록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둘째는 베트남의 대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미국 기업에게 일정 지분을 배려함으로써 베트남 경제제재에 대한 클린턴 행정부의 선의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 실제로 여러 미국기업들은 행정부의 경제제재 해제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토롤라(Motorola),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코카 콜라(Coca Cola), 캐터필러(Caterpillar) 등 미국의 우수 기업들은 이미 사업을 위한 기초작업을 마친 상태에 있었다. 예컨대, 일리노이주에 본사를 둔 캐터필러는 도로, 하수도, 광산, 목재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베트남에 두 개의 영업소를 개설하고 주문까지 받은 상태에 있었다. 즉, 캐터필러의 경우는 베트남 내에서 경영을 시작하였지만 교역은 성사되지 않은 기묘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당시 캐터필러는 일본 경쟁사인 고마츠(Komatsu)의 진출에 대해서 내심 불안해하고 있었다.³⁹⁾ 따라서 미국의 베트남 경제제재 전면 해제와 동시에 미국기업 또는 미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영업 개시가 이루어졌다.

미·베트남 사이의 경제관계는 1995년 10월 워싱턴에서 크리스토퍼(Warren Christopher) 미국 국무장관과 구엔 만 캄(Nguyen Manh Cam) 베트남 외무부장관 간에 미·베트남 무역협정을 시작하기 위한 부처간 조약을 구성하고 이를 베트남에 파견하기로 동의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⁴⁰⁾ 그러던 중 1998년 3월 클린턴 행정

39) *Sales & Marketing Management*, Vol. 147 (April 1994), p. 15.

부는 비시장경제 국가에게 최혜국지위 부여를 거부해온 무역법의 잭슨·베닉(Jackson-Vanik)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양국간 무역에서의 큰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다. 잭슨·베닉조항의 적용 면제는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 매년 갱신받아야 하지만, 이는 비시장경제 국가인 베트남에게 정상무역관계를 허용하는 무역협정 체결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미·베트남 사이의 무역협정은 지루한 협상을 거듭해 오던 중 1999년 7월에 이르러서야 원칙적 합의를 보았으며, 2000년 7월 13일 마침내 미국 무역대표부 살린 바셰프스키와 베트남 무역부 장관 부 판 사이에서 체결되었다.⁴⁰⁾ 이로써 양국은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지 꼭 25년만에 비로소 경제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는 이같은 미·베트남 경제관계의 진전이 미국의 세계경제 전략 특히 일본의 자본 수출에 대한 의회내 보호주의적 압력에 대한 발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중엽 이후 일본은 최대 자본수출국 지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수출중심에서 투자중심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수출입은행 대부프로그램 지원과 세금혜택을 바탕으로 미국, 서유럽 등 선진국뿐만 아

40)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10/16/1995, Vol. 6, p. 740.

41) 잭슨·베닉조항이라고 불리는 무역법(Trade Act) 402조는, 최혜국 지위가 없는 비시장경제 국가가 자국 국민의 자유로운 무제한적 해외이민을 허용한다고 미국 대통령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히 최혜국 지위를 받도록 허용해주는 규정을 말한다. 대통령은 어떤 국가에 대한 잭슨·베닉조항의 적용면제를 갱신하려면 매년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6월 3일까지 갱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베트남의 경우 미국으로부터 이 조항의 완전한 적용면제를 받아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를 유지하려면 WTO의 회원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2000년 7월 미·베트남 간의 양자적 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매년 잭슨·베닉조항의 적용면제 연장에 관한 결정을 통해 베트남과의 무역관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이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에 가입하게 되면, 미국은 무역관계를 제한하는 국내법 조항을 WTO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나라 동남아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였다. 일본은 전자, 기계, 자동차 등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여 현지 생산을 대폭 늘려 나갔다. 더욱이 일본은 자본주의의 국제화 전략으로서 두뇌작업 (brain work)은 일본에서 그 외의 작업은 임금이 싼 제3국에 맡겨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블록수준의 분업화를 구사하였다. 그 결과 1986년에서 1989년 사이의 ASEAN에 대한 직접투자는 7배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직접투자영역도 점차 전자, 자동차 등 제조업뿐만 아니라 금융, 건설, 운수 등 서비스 분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블록수준의 분업화 전략은 미국에도 영향을 주어 국내에서 두뇌작업 및 고급기술과 서비스를 특화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 기타 부문을 특화시켜 경쟁력 제고를 노리게 되었다.⁴²⁾ 즉,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관계의 확대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일본의 대동남아 분업화 진출에 대한 대응이었으며, 국내적으로는 미국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욕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베트남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양국은 다른 국가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게 되었고, 관세인하, 지적재산권 보호, 투자장벽 대폭 완화 등이 뒤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제 미국 기업들은 베트남 진출에 본격 나섬에 따라 경제를 극적으로 개방시키는 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시장에도 베트남 상품들이 밀려들 전망이다.

무역협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으로 베트남 측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다른 국가들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시장 개방을 위해 각종 법률과 제도들을 광범위하게 개정해야 한다. 미국의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분야와 함께 신발(나이키)과 곡물업(카길

42)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서울: 민음사, 1999), pp. 39~40 & 126.

사) 등의 기업들은 베트남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국 측에서는 해마다 갱신하는 절차를 밟긴 하지만 베트남에 정상무역관계(normal trade relation) 지위를 부여하고 베트남 상품이 낮은 관세로 미국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게 된다. 협정이 발효되면 베트남 수출업자들은 기존 평균 40%에 달하는 높은 관세 대신에 3% 미만의 관세만을 내게 된다.⁴³⁾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이후 남은 중요한 현안은 베트남의 WTO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이미 ASEAN 가입과 함께 AFTA 하의 역내 자유무역의 흐름에 편승하였고, 마침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사실상 WTO의 전제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43) 『조선일보』 (2000. 7. 14).

IV. 아세안·베트남의 경제관계 발전

1. 관계개선 과정

ASEAN은 1967년 8월 8일 방콕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일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하였다. 오늘날 아세안은 아세안 선언(ASEAN Declaration)을 통해 기구의 목표를 크게 두 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평등과 파트너십에 바탕한 공동노력을 통해 지역의 경제성장, 사회 및 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고, 둘째는 역내 국가들이 정의와 법정신에 의거하고 유엔 헌장의 원칙에 근거해 평화와 안정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ASEAN 회원국들의 초창기 목표는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에 더 비중이 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1976년 2월 ASEAN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에서는 주로 국가간 협력과 동시에 주권을 보장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던 데서 알 수 있다.⁴⁴⁾

- 회원국들의 독립, 주권, 평등, 영토보전 및 국민 정체감의 상호 존중
- 외부로부터의 간섭, 전복, 강압으로부터 자유로운 각 국가의 권리
- 상호 내정 불간섭
- 분쟁과 갈등의 평화로운 해결

44) <http://www.imf.org/external/np/sec/decco/asean.htm>.

- 무력 사용 위협의 포기
- 회원국들 사이의 효율적 협력

등이 그것이다. 이들 원칙은 시기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된 때는 베트남의 공산화 통일 직후로서 베트남 팽창주의에 대한 ASEAN 국가들의 위기의식과 안보적 차원의 대응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ASEAN의 존재 의미는 상당기간 인도차이나 반도의 불안정을 의식한 동남아 국가들의 안전보장에 있었던 것이다. 이는 인도차이나 국가들의 ASEAN 가입이 인도차이나 반도의 가장 큰 정치·군사적 현안이었던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이루어진데서 알 수 있는바, 베트남은 1995년, 라오스와 미얀마는 1997년, 그리고 캄보디아는 1999년에 회원국이 되었다.

ASEAN은 실제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으로 인해 동남아 국가가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간다는 목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다. ASEAN은 특히 베트남이 1978년 6월 CMEA에 가입하자 ASEAN의 창설 취지에 대한 베트남의 지지와 협력 입장에 대해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베트남은 1976년 태국 및 필리핀과 관계정상화를 맺었는가 하면 1978년에는 팜 반 동(Pham Van Dong) 수상이 ASEAN 국가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대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다. 또한 ASEAN의 평화, 안정, 번영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태도의 근거에는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동남아 역내국가가 아닌 중국이 주적(主適)이라는 의식이 깔려 있었다.⁴⁵⁾ 그러던 베트남이 또 1978년 11월 모스크바에서 소·베트남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곧

45) Gareth Porter,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 203~4.

바로 12월에 헝 삼린의 캄보디아 구국민족통일전선을 앞세우며 20만 대군이 프놈펜을 향해 침공하게 되자, 베트남의 CMEA 가입과 관련해 ASEAN이 베트남에 대해 품기 시작했던 의혹은 곧 위기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ASEAN은 1979년 1월 방콕에서 특별외상회의를 개최하여 베트남의 ASEAN에 대한 상호독립, 주권, 영토보전을 존중하며 동남아 평화와 안정에 협력할 것이라고 한 베트남의 다짐을 상기시키는 한편, 캄보디아의 헝 삼린 신정부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고 캄보디아 영내의 베트남군의 전면철수를 촉구하는 강경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ASEAN은 모두 폴 포트 정부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까닭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대로 계속해서 폴 포트 정부의 합법성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이후 ASEAN의 외교전략은 국제무대에서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형태를 띠는 한편, 미국, 일본, 중국 등 강대국들과 함께 소련과 베트남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는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었다.⁴⁶⁾

1980년대 들어 ASEAN 국가들은 역내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이라는 설립 취지를 제쳐놓고 대베트남 안보정책에만 몰두하기에는 너무나 소모적인 기구가 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제 ASEAN은 실세화를 통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게 되었는바, ASEAN과 태평양 선진국이 협력하는 방안이었다. ASEAN은 1984년 7월 자카르타 외상회의에 이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태평양 선진 5개국과 이른바 'ASEAN 6 + 태평양 5 회의'를 개최해 태평양 지역협력 프로그램에 합의하였다. ASEAN 회원국은 장기적으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협력 차원에서 태평양 협력시대의 필연성에 대응하게 된

46) 양승윤,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아세안,” 강태훈 외,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pp. 257~8 & 271.

것이다.

베트남의 경제난국과 소련의 베트남 원조감소는 점차 독자적 생존 모델을 모색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도이 모이와 대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원자인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장기화로 1982년부터 베트남 원조액을 삭감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또 고르바췌프 등장 이후 소련이 중국 외교를 강조함에 따라 중·소 화해무드가 형성되어 가자 베트남의 대소련 발언권은 더욱 감소하게 되었다.⁴⁷⁾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IMF에 23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하는 동시에, 구엔 코 탁(Nguyen Co Thach) 외상이 ASEAN 회원국들을 순방하면서 대ASEAN 유화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또한 ASEAN 회원국가와 베트남 사이의 양자적 접촉이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증가하였고 무역량도 서서히 증가하게 되었다. 1984년 2월 인도네시아의 무르다니(Benny Moerdani) 장군은 ASEAN과 사전 협의없이 하노이를 방문하여 베트남의 대ASEAN 군사위협 감소에 대해 협의했는가 하면, 말레이시아는 베트남과 비밀협정을 통해 1985년 12월부터 호치민·쿠알라룸푸르 간의 화물항공운항을 시작하였다.⁴⁸⁾

우리가 주목할 것은 ASEAN과 베트남 간의 관계개선, 특히 ASEAN을 통한 베트남의 동남아 경제권으로의 편입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중요한 걸림돌로 남아 있었다. 즉, 오랫동안 자원축출 전략에 있어 대외의존적

47) 중·소의 화해무드는 캄보디아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중국은 1983년 3월 캄보디아 문제에 있어 사적이익을 추구할 의사가 없으며 유엔감시하의 총선거 실시를 존중하고 캄보디아의 독립, 중립, 비동맹 지위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청호, “캄푸치아분쟁의 원인과 경과,” 강태훈 외,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p. 126.

48) 양승운,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아세안,” pp. 274~5.

이었던 베트남이 도이 모이를 추진해 나가면서 ASEAN과의 접촉을 원하였지만, 미국과의 관계개선 없이는 큰 진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이는 1995년 미·베트남 관계 정상화에 즈음하여 베트남이 ASEAN 회원국이 된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고 하겠다.

미·베트남 관계와 ASEAN·베트남 관계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미국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미국은 캄보디아문제에 대해 깊숙이 개입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내 미군실종자 및 포로에 대한 현안으로 베트남과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다. ASEAN이 미국을 비롯한 태평양국가와의 연대를 모색한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의 베트남 인식은 당연히 안보적 차원에서 베트남의 팽창주의를 우려한 ASEAN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미·베트남간의 관계 정상화와 동시에 베트남의 ASEAN 가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베트남은 1995년 7월 ASEAN의 7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당시 ASEAN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베트남의 가입을 허용하였다. 첫째로 베트남의 안보적 위협 요소가 사라진 시점에서, ASEAN의 규모를 확대하고 ASEAN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오스와 미얀마가 1995년 7월에 그리고 캄보디아가 1999년 4월에 추가 가입함으로써, 회원국은 이제 10개 국이 되었다. 이에 따라 ASEAN은 총 5억 인구의 국제기구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둘째는 역내 질서를 확보하고 갈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는 ASEAN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협력이 주요한 것으로 여겨진 바, 베트남의 가입으로 역내 시장 규모와 보완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입장에서도 ASEAN 가입을 바라던 참이었다. 베트남은 ASEAN 회원국이 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얻게 됨은 물론 국제사회

에서 자신의 입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믿었다. 즉, ASEAN 회원국으로서 베트남은 AFTA에 속하게 되어, 역내 경제권에 합류함으로써 후발국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AFTA는 2003년까지 구성을 완성키로 되어 있는데, 그 때까지 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ASEAN 국가들간의 수입관세를 0~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하였다. 뿐만 아니라 향후 ASEAN 국가들간의 수입장벽을 제거하여 자신들 사이에서만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협정을 맺기로 하였다.⁴⁹⁾ AFTA는 그 과정에서 개별 국가의 발전전략을 고려하여 관세장벽 완화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이 점에서 후발 주자인 베트남은 산업발전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AFTA에 속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보다도 3년 연장된 2006년까지 자유무역을 위한 조치를 완결하도록 하는 특혜를 부여받았다. 한편, 라오스와 미얀마는 2008년, 그리고 캄보디아는 2010년까지 동일한 조치를 마쳐야 한다.

이제 ASEAN은 베트남으로서는 점차 중요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 들어서 ASEAN과의 무역거래는 매년 평균 25% 이상 증가하였다. 1993년 경우 수출의 24%와 수입의 36%가 ASEAN 국가들과 이루어졌으며, 전체 무역량의 3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트남이 ASEAN 역내에서 시장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점이다. 베트남과 ASEAN 사이의 무역은 ASEAN 전체 무역량의 1% 밖에 차지하지 않는다.⁵⁰⁾ 즉, ASEAN이 베트남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셈이지만, 반대로 ASEAN 전체의 입장

49) 이 점이 APEC 등 아-태지역의 무역블럭과는 구별되는 것인 바, APEC는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게도 동등한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게 되어 있다.

50) Neal Forster, "Vietnam and the ASEAN Free Trade Area,"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No. 8 (Winter 1996), p. 53.

에서는 베트남이 아직까지는 매우 협소한 시장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AFTA의 성공이 베트남에게는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이 과정에서 베트남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은 셈이다. 베트남은 ASEAN 특히 AFTA 안에서 경제적 수혜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무조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 의무조항들은 ASEAN 국가들의 호혜관세 제도로서, 첫째로 베트남은 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관세인하 일정을 준비해야 되는 바, 199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6년 1월 1일 까지 0~5%로 낮추어야 한다. 둘째로 미가공 농산물에 대해서도 관세인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0~5%로 낮추어야 한다. 셋째로 2006년까지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해소해야 하는 바, 비관세 장벽이란 특히 수출입품목 제한과 수량제한을 말한다. 넷째로 외환 제한조치를 해제하는 것 등이다.⁵¹⁾

2. 아세안 가입효과와 과제

베트남의 의무조항 이행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낳을 것이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의무조항 이행에 있어서 베트남의 경제전략과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지대화에 따른 무역 활성화로 인해 산업화와 현대화 진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1) Pearl Imada and Seiji Naya, *AFTA: The Way Ahea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2).

가. 지역 및 세계시장 확보

베트남이 작게는 5억 인구의 ASEAN 시장 그리고 크게는 아시아 전역에 접근하게 됨에 따라 베트남의 수출은 규모의 경제에서 얻어지는 효과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실제로 1990년대 들어 베트남의 무역은 과거의 대소련 및 CMEA 의존적 구도에서 벗어나 아시아 전역과 유럽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에는 약 80% 정도의 무역이 소련 및 여타 CMEA 국가들과 이루어졌다. 그러나 그후 몇 년 사이에 베트남은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 투자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다행하게도 이같은 노력은 성과를 거두었다. 구체적으로, 1993년 기준으로 베트남 전체 교역 총액에서 62%의 수출과 82%의 수입이 아시아 국가들과 이루어진 반면, 오직 5%의 수출과 2%의 수입이 구소련, 즉 독립국가연합과 이루어졌다.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ASEAN 회원국인 싱가포르와의 무역은 베트남에게 매우 중요하다. 당시 베트남과 싱가포르간의 무역은 13억 달러에 이르렀는 바, 베트남 무역 총액이 5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의 1/4 가까이 차지한다. 싱가포르에 이어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파트너인데, 1992년에는 베트남과 1억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졌다.⁵²⁾

또한 베트남의 생산품은 AFTA의 호혜적 관세 제도에 따라 타 지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여타 ASEAN 국가로부터의 수입 상품의 관세인하와 가격인하 때문에 베트남의 수출상품 가격인하를 가져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52) Donald S. Zagoria, "Joining ASEAN," in James W. Morley and Masashi Nishihara, eds., *Vietnam Joins the World* (Armonk, New York: M. E. Sharpe, 1997), pp. 161~2.

지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입 관세의 제거는 베트남의 수요자들에게도 가격인하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그리고 베트남은 다른 어떤 ASEAN 국가보다도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역내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생산하는 저가의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농업관련 생산물을 유일하게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베트남의 ASEAN 참여에 따른 무역 중진과 경제적 효과는 단순히 AFTA를 통한 보호무역의 혜택을 누리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점일 것이다. 만일 비회원국과의 경제협력을 희생시키면서 AFTA의 보호무역의 수혜국이 되는데 그친다면, 베트남 경제의 ASEAN 경제권 편입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다. 베트남 지도부도 이같은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베트남의 ASEAN 가입과 AFTA에의 합류는 이미 2000년 7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었으며 또한 향후 WTO 가입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나.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관세 장벽이 점차 제거됨에 따라 많은 베트남의 국내 산업은 ASEAN 국가들의 산업과 경쟁하는 입장에 놓이게 될 것이다. 베트남의 낮은 경제수준으로 볼 때, 수많은 지방산업은 투자자본과 기술의 한계 때문에 단기간내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특히 높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산업들이 가장 취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석유, 철강, 화학비료, 시멘트를 생산하는 국영기업들이 해당된다. 국영기업들은 전체 노동력의 25%를 고용하고 있으며 50%에 가까운 국가 세입에 기여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들은 언젠가 실업과 도산

의 근원지가 될 수 있다.⁵³⁾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이들 산업에 대한 보호를 가능한 한 연장시켜나가되 2006년 무역장벽을 완전 제거하기 위한 준비로 산업 구조조정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산업 구조조정은 ASEAN과 AFTA 회원국으로서 요구되는 상황만은 아니다. 베트남 국내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구조조정 요구는 오히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나오고 있다. 베트남 당국은 1999년과 2000년에 세계은행 및 IMF와 구조조정신용(structural adjustment credit)과 같은 원조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 논의는 세계은행, IMF, 베트남의 정책관련 부서들간 협의 하에 마련된 '정책기본서'(Policy Framework Paper)를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거기에는 주로 국영기업 개혁, 민간부문 발전, 은행개혁, 무역개선 등이 포함되어 있다.⁵⁴⁾ 말하자면, 베트남의 자본주의경제로의 편입에 따르는 비용으로서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다. 정부세입의 감소

관세인하 조치는 당장 정부 세입원의 감소를 뜻한다. 1995년 수출입세가 전체 세입의 23~25%를 차지하였는 바, 이제는 다른 곳에서 세원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1996년에 도입된 사치품에 대한 과세는 일부 다른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에 대한 보상효과를 내고 있다.⁵⁵⁾

53) Neal Foster, "Vietnam and the ASEAN Free Trade Area," pp. 58~9.

54) Kazi Martin and Duc Minh Pham, "Vietnam Trade Liberalization: Following the AFTA Program,"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No. 22 (Summer 2000), pp. 26~7.

55) 하지만 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여한다는 것은 또 다른 관세장벽을 만든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점은 AFTA 편입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세계개혁과 관련하여 베트남 정부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1998년에 도입된 부가가치세가 세원의 확충 또는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6~9년 사이에는 세입의 감소는 그렇게 크지 않으나 앞으로는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베트남 정부는 중기적으로 관세인하로 인해 ASEAN 국가간의 무역이 증대되어 세원 상실을 다소 완화시켜 줄 것으로 보고 있다. 만일 ASEAN 국가에 대한 수출이 1990~5년 처럼 2006년까지 매년 20% 정도 증가하고 관세인하가 이루어진다면, 2006년의 전체 관세 수입은 1995년의 관세 수입보다도 약간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V. 해외자본의 유입방식 및 유형

1.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미·베트남의 경제협력관계는 경제제재 해제 이후 국제금융기관에서 미국의 지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IMF와 세계은행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지대한 바, 여기서는 이 두 국제금융기구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통일 후 베트남은 구 남베트남 정부의 IMF 회원권을 승계 받아 2억 5천만 달러를 차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1984년 12월 특별인출권(SDR) 사용금지조치에 의하여 IMF의 베트남 지원은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에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의 일환이었으며, 후일 프랑스, 일본 등이 연체금상환 지원을 통해 IMF의 용자재개를 시도하였으나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하고 말았다. 이같은 미국의 비토권 행사는 1992년까지 계속되었다. 캄보디아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1993년 8월 미국은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금융지원 재개를 허용하기로 하였고, 동년 10월 프랑스와 일본이 주도하는 베트남의 대 IMF 연체금 1억 4천만 달러를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IMF는 1993년 10월 2억 2천 3백만 달러의 용자를 제공하였다.⁵⁶⁾

IMF는 1993년 이후 재정, 금융, 외환정책의 정상화 또는 합리화를 조건으로 3~5년의 중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베트남은

56) 권윤,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지원체계와 방향,” 『지역경제』 (1994년 10월), p. 64.

1993년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93년 12%, 1994년 10% 이내로 억제하기로 약속하고, 경제성장률은 같은 기간에 7%와 7~8%로 유지한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IMF는 경제제재 해제 이후 베트남이 민간주도의 장기유자인 상업차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었는바, 이는 과도한 자금조달이 향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까 우려하였기 때문이다.⁵⁷⁾ 따라서 미국이 IMF의 대베트남 지원에 비록 협조하기는 하였으나, 타 선진국으로부터의 상업차관 유입에는 비협조적인 양면적 태도를 보이게 된 셈이다.

한편, 세계은행의 IDA는 1인당 GNP 760 달러 이하의 저개발국을 대상으로 장기유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1993년 11월 베트남에 대해 3억 2천 450만 달러 규모의 유자를 결정하였다. 유자조건은 10년 거치 40년 분할상환에 금리없이 연 0.75%의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 다양한 세계은행으로부터의 ODA 기금은 주로 발전소, 도로, 항만, 농업관개시스템, 상수도 등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와 교육, 보건·의료, 금융제도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IMF의 지원이 주로 베트남의 금융정책 현대화와 구조조정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반면, 세계은행의 금융지원은 사회간접자본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됨으로써 경제개발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산업 발전에 목표를 두고 있다. 물론 IMF와 마찬가지로 세계은행도 구조조정 작업에 자금을 투입하기도 하지만, 시장지향적 개발정책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장 왜곡요인의 제거와 자율적 시장기능의 회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57) Ibid., 65.

2. 외국인직접투자

FDI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한 베트남은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듬해부터 발효시켰으며, 이미 1990년, 1992년, 1996년, 2000년 등 수 차례에 걸쳐 개정한 바 있다. 외국인투자법에 힘입어 베트남은 2000년 3월 기준으로 2,961건의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하였으며, 그 규모는 367억 2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서 157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이미 실행 중에 있다.⁵⁸⁾

국가별로 보면, FDI는 1997년 8월 당시 금액기준으로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한국 순으로 기록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단연 수위를 기록하였고, 그 뒤를 이어 호텔·관광, 공업단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서 FDI가 급증하여 베트남 경제발전을 위한 투자자본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FDI는 대상국에게 자본형성, 인적자원 개발, 기술 및 노하우, 시장 및 대외무역 확대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 준다. 또한 국내정책의 왜곡을 방지하고 투자환경의 개선을 가져와 공적투자를 보다 활발하게 이끄는 효과를 낳는다. 베트남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바, 특히 경제구조를 산업화와 현대화 방향으로 이끈 동시에 기술혁신, 신상품개발, 시장개척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된다.

58)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A Guide to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Hanoi, May 2000), p. 3.

<표 8> 주요 국가별·연도별 대베트남 투자추이

(단위: 건수, 백만 달러)

	1988~92		1993		1994		1995		1996		1997.6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싱가포르	25	113	26	250	29	598	37	488	32	2,764	11	124
대만	69	1,123	44	404	64	265	51	1,149	48	783	26	74
홍콩	96	508	35	402	48	547	22	104	13	1,258	11	102
일본	29	318	15	76	27	333	47	1,130	54	591	34	289
한국	16	148	37	371	42	265	47	565	46	826	11	140
영국	11	290	1	1	2	9	33	864	15	392	8	169
말레이시아	13	92	12	347	11	126	12	94	7	89	4	18
미국	-	-	1	0.2	20	220	22	531	12	93	6	78
호주	n.a.	n.a.	14	158	11	50	10	222	5	48	2	3
프랑스	25	194	18	168	17	110	14	124	15	102	6	18
합계	450	4,096	261	2,615	340	3,722	367	6,524	325	8,497	148	1,546

출처: 정재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 51.

<표 9> 분야별 외국인투자 현황 (1997.8.14까지)

(단위: 백만 달러)

분 야 별	건 수	금 액
제 조 업	1,103	13,400
호텔·관광	268	7,500
공업단지	16	4,000
석유·가스	23	1,200
운송·통신	55	1,100
농·임업	58	419
금융·은행	19	265
수출가공지대	60	203
서비스	86	166
주택개발	33	106
어업	20	65
기타	27	215
합계	1,768	28,600

출처: *Vietnam Economic Times* (1997.9), p. 52, 정재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p. 52에서 재인용.

구체적으로 FDI가 베트남 경제에 기여한 근거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베트남 경제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1991년~1997

년 동안 연평균 8.5%라는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하였는데, 이것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FDI의 역할은 심대했다. 1995년이래 총 베트남 투자자본의 무려 27%를 FDI가 차지하였다. 또한 FDI는 집중하여 1998년 기준 GDP의 9.8%를 차지하였다.⁵⁹⁾

1996년을 기점으로 증가추세가 꺾이기는 하였으나, GDP 대비 FDI, 즉 FDI/GDP는 전세계 외국인투자 유치국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평균보다 약 7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유사한 개혁·개방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보다도 높게 나타났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베트남의 실질 GDP 증가율과 FDI/GDP 사이의 관계이다. 전세계 FDI 유치국들 중에서 베트남은 말레이시아와 함께 최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DI가 베트남 경제에 기여도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려준다.

분야별로 FDI가 베트남 경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자면, 먼저 대외무역에서 FDI 프로젝트의 거래가 활발하다. 1996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과 수입에서 FDI 프로젝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0.8%와 18.3%를 차지하였다. 또한 외자기업의 활성화로 베트남인의 고용증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베트남의 투자기획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는 19만 6천명의 베트남인이 외자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BCC까지를 포함한다면 연평균 34만~40만 개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공적으로 1995년 말까지 약 100만 명이 외자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⁰⁾

59)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 *A Guide to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p. 4.

60) 정재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p. 58.

여기서 주목할 것은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대베트남 직접투자가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는 점이다. FDI는 1996년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으나, 1997년부터 꺾이기 시작하였다. 1999년 허가된 FDI는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7년과 1998년에 비해 절반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1996년의 17.7%에 불과하였다.

<표 10> 1990년대 외국인직접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허가기준)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투자액	2,978	4,071	6,616	8,661	4,514	4,059	1,534
증가율(%)	·	36.7	62.5	30.9	-47.9	-10.2	-43.0

출처: *Vietnam Investment Review* (March 6~12, 2000).

FDI가 이렇게 감소하게 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FDI의 70~75%를 차지하는 아시아 투자자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새로운 투자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금융위기 이후 베트남 투자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⁶¹⁾ 이는 아직까지 베트남의 금융부문의 취약성, 국영기업과 민간부분의 차별적 대우, 민간부분 성장을 저해하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규제, 자유로운 정보교환의 제한 등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외국인투자자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61) Tran Dinh Thien, "Impact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on Vietnam's Economy,"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No. 22 (Summer 2000), pp. 7~8.

3. 공적개발원조

FDI가 민간차원의 투자인 반면, ODA는 국가간에는 주로 외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그리고 국제기구에서는 핵심 멤버 국가들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ODA는 FDI에 비해 규모는 적지만,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주로 인프라 구축에 투자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ODA의 성격이다. 1994년과 1995년 경우를 보면, 인프라에 대한 프로젝트성 차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원분야별로는 경제관리 지원에 가장 큰 지원이 이루어졌으나, 이것은 경제계획, 회계, 금융 등 거시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술지원 외에도 경상수지 보전을 위한 지원이 상당부분 차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ODA는 대부분 생명체에 비유한다면 순환기 계통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산업에 할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지원이 관개프로젝트와 임업프로젝트와 같은 농업기반, 교육 및 보건 등 사회서비스 분야, 항만과 도로의 건설 및 보수, 발전소 건설 및 증설 등의 분야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ODA는 특히 1993년 8월 미국이 IMF의 대베트남 지원에 동의함으로써 활발해지기 시작한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국가의 원조는 1994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국가별로는 1995년까지 베트남에 대한 ODA는 주로 OECD의 DAC 회원국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집행액 기준으로 볼 때 일본 6억 3,400만 달러, 프랑스 3억 4,320만 달러, 스웨덴 2억 1,700만 달러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여기서 일본의 원조가 두드러지는 바,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과 일본국제협력사

업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난다. 국제기구별로는 1995년까지 IMF와 세계은행의 IDA가 가장 많이 지원하였으며, 그 뒤를 이어 UNDP, UNICEF, ADB, UNHCR 등이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VI. 베트남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

1.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의 특징

가. 경제의 대외의존성

베트남의 경제체제는 대외의존적 성향을 유지해왔는바, 베트남전쟁 기간 동안이나 현재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회주의 대변혁을 전후하여 의존 대상과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다. 베트남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상반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의 대외의존성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경제 특유의 정체성은 거의 사라지게 되는 반면, 세계경제로의 용이한 편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베트남은 초기에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발전전략을 고수하였는데, 특히 1978년 CMEA 가입과 소·베트남 우호협력조약 체결 후에는 소비에트식 경제발전전략에서 탈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같은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동력이 있었다.

하나는 1975년 베트남 통일 후 지도부의 남부지역에 대한 사회주의 이행의 강요였다. 전통적 농업국가였던 베트남에서 중공업 중심의 사회주의 산업화가 어떤 효율성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유일한 전략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전략은 남부 베트남에게 더더욱 맞지 않은 전략이었다. 다모작의 농촌사회를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해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마저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 결과는 풍요로운 농업국가를 식량부족국가로 전략하게 만드는 것뿐이었다. 다

른 하나는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었다. 새로운 전쟁 수행과 주둔군에 대한 물적 지원에 대한 부담은 베트남이 소련을 비롯한 CMEA 국가들로부터의 원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제상황을 만들었다. 경제적 의존은 곧 원조국가 경제발전 모델에의 적응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혜국가인 베트남의 특성과 수요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될 수 없었다.

베트남의 대외의존적 경제는 효율성은 물론이고 효과성(effectiveness)과도 거리가 멀었다. 소련을 위시한 CMEA 회원국들은 주로 베트남에 대한 원조 총량에만 관심을 가졌다. 성공적인 경제 발전은 외부원조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경제적 자립도를 지향하는 것이었어야 할 것이다. 무상원조이든 또는 차관이든 베트남의 경제적 자립구조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이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베트남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원조국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원조국가들의 기계, 화학, 전자 등 프로젝트성 원조와 인적 및 기술지원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원자재 및 부품 수입 때문에 무역적자를 지속적으로 초래하였다. 무역적자 또한 지원국가들의 보존으로 채워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경제적 종속을 연장할 뿐이었다.

1986년 도이 모이가 추진될 당시, 베트남 지도부는 경제의 소련 및 CMEA 의존성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었다. 특히 분산투자와 낭비적 요소에 대한 지도부의 자기반성이 중요한 논의 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베트남이 대내개혁과 함께 개방정책을 선언했다고 하지만, 이는 주로 소련 및 CMEA 국가들과의 국제적 분업 차원에서 고려된 것이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미·베트남간의 관계, 특히 캄보디아 문제로 인해 서방권으로부터 자본유입을 기대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결국 베트남의 소련 및 CMEA 의존적

경제정책은 초기 개혁·개방 시기에도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1987년 10월 CMEA 임시회의에서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장기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베트남을 지원하기로 한데서, 우리는 베트남의 경제체계가 지속적으로 대외의존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1990년대 들어서 베트남의 대외경제관계는 서방권으로 바뀌었지만 대외의존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에 개혁·개방 정책을 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이다. 베트남은 1987년 12월 외국인투자법을 채택하여 사회주의권 및 자본주의권으로부터의 자본수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1989년 이후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혁으로 원조가 중단 상태에 놓일 때, 베트남은 원유와 쌀 수출을 개시함으로써 대외의존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가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베트남 지도부의 실용주의적 사고는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였다.

1990년대 베트남 경제는 세계은행과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수용함에 따른 개혁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기본성격이 변화되었다. 사회주의 요소들이 공기업 민영화, 가격자유화, 수출가공구 설치, 거시경제 안정화 등 과제를 점진적으로나마 수행해 나가면서 베트남 경제는 시장주의적 체계로 전환되어 나갔다.

나. 대외경제개방의 대상

1980년대 후반 베트남이 대외개방 정책을 표방할 때만해도 그 내용은 과도기적인 것이었다. 즉 소련·동구와 자본주의권을 동시에 겨

양한 것이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인투자법의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가 ‘사회주의적 산업화’를 위한 자본, 기술 축적을 증대시키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투자법은 합영사업을 장려하고, 선진경영기법 도입과 경제관료 및 숙련노동자 훈련 등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당시의 외국인투자법은 오늘날의 외국인투자법과는 목표하는 바가 달랐던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위기와 붕괴, 특히 소련연방의 해체로 인해 자본 및 기술의 축적의 대상은 서방권으로 급속히 이동하였다. 또한 개방의 방식도 FDI,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개별국가의 ODA, ASEAN과의 경제협력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첫째, FDI는 1990년대 초 미·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의 정체에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1988년부터 1992년 사이에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프랑스 등은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에 나서 선점의 기회를 포착하려 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69건의 투자건수를 올렸으며, 투자 총액도 10억 달러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FDI는 국제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교적 별개인 채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바, 이는 민간차원의 자본 진출이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은 미·베트남 관계 진전에 따라 이루어졌다. 베트남은 통일 후 IMF로부터 2억 5천 달러를 차입한 적이 있으나, 1984년 IMF의 특별인출권 사용금지 조치에 의해 공식적인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미국의 국제금융기구 내 비토권 행사에 따른 결과로서 1992년 부시 행정부 말기까지 지속되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베트남에 대한 경제체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내법인 대적성국교역법은 물론이고 IMF,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은 새로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가 캄보디아 문제의 해결로 미국의 세계 전략이 실현되고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실행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1993년 8월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을 재개하도록 허용하였고, 9월에는 국제금융기구가 지원하는 베트남내 프로젝트 입찰에 미국 기업이 참여하게 하는 경제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에 있어서 미·베트남 관계는 절대적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셋째,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의 ODA는 지원국가의 베트남과의 외교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베트남 ODA가 1993년 8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에 동의함으로써 활발해지기 시작한데서 알 수 있다. 규모면에서 ODA는 FDI보다는 적기는 하지만,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에 주목할만하다. 또한 성격상 인프라를 비롯한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목표를 가진 지원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ODA가 규모면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심을 끄는데, 1998년에는 3억 8,861만 달러를 기록하였다.⁶²⁾ 일본의 ODA는 ‘얼굴이 보일 수 있는 원조’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민간기업의 참여적 개발을 강조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ASEAN과의 경제협력은 1995년 미·베트남 관계정상화와 함께 개시되었는 바, 앞으로 AFTA를 중심으로 한 역내무역의 활성화에 따른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는 역내 블록에의 참여로 인해 국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국영기업이 위기에 처하고 국고의 수입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경제의 자본주의로의 편입을 고무받게 될 것이다.

62) 이창재·권율·안응호, 「공적자금의 연계를 통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p. 88.

다. 개혁·개방의 상호관계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밀접한 상호관계를 지니고 있다.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소련 및 CMEA 원조체제 하에서 1986년 시도한 도이 모이는 주로 대내 경제구조의 개혁을 통해 비효율적 요소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개혁정책은 대소 및 동구권의 원조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사회주의권과의 국제적 분업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진되었다. 물론 베트남이 1987년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통해 서방권으로부터의 자본수입을 동시에 겨냥하기는 했지만, 당시만 해도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초기의 개혁정책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블록의 범주 안에서 거의 일방적 원조에 의존한 반면 엄밀한 의미에서 개방이라고 말하기 힘든 정책이었다.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1990년대 개혁정책은 대외경제개방이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급변하였다. 즉, 대내 개혁정책의 추진은 개방을 전제로 해서 가능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주의권의 대베트남 원조는 중단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금융기구와 서방의 지원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목할 것은 FDI,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ODA 등에 따른 자본수입으로 인해 베트남 경제체계의 전환이 요구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1980년도 후반의 사정과 대조된다. 소련 및 CMEA 원조체제 하에서 추진된 베트남 도이 모이는 외부로부터 요구된 개혁이 아니었다. 당시의 개혁정책은 고르바초프의 등장에 따른 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와 베트남 지도부의 자기성찰 속에서 나온 것이었다. 따라서 베트남은 스스로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또한 경제체계의 정체성을 그들의 모델에서 찾는 가운데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예를 들어, 1987년 10

월 CMEA 제43차 임시회의에서 장기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채택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는 하였지만, 원조의 효과적 활용, 경제적 잠재성을 고려한 원조, 효율성 및 효과성 증대 등 수혜국인 베트남의 입장을 반영한 사항들이었다.

1993년 8월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지원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베트남 지도부의 의지와는 다소 괴리된 내용의 개혁조치들이 요구되었다. 이같은 요구는 크게 보면 경제체계의 이행요구였고, 구체적으로 보면 가격자유화, 재정과 금융의 분리, 국영기업 개혁이었다.⁶³⁾ 실제로 베트남은 IMF와 세계은행의 금융지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또는 수용함에 따라 이들 기구들이 기대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첫째, 가격자유화는 구소련의 원조중단으로 인해 IMF와 서방국가로부터 외자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조치로서 추진되었다. 가격자유화는 베트남 개혁정책 중 가장 핵심적이면서 선행되는 것으로서, 거시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자와 물가급등을 막는데 초점을 두었다. 가격자유화는 농업생산물의 가격자유화부터 환율의 실세화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것이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하의 농산물 가격관리체계를 없애는 것으로서, 협의가격제로 전환시켜 사실상 농산물가격에 시장가격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공업부문에서도 협의가격제를 도입하여 가격결정권이 실제로 개별기업에 부여되었다. 그 결과 1992년에는 가격통제품목이 전력, 석유, 철강, 요소비료 등에 국한될 정도였으며, 각 산업의 생산요소 구입과 생산물 판매가격은 대부분 시장가격화되었다.

63) 권율, “베트남 경제의 구조전환과 투입산출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1999년 가을호), pp. 149~58.

둘째, 재정 및 금융개혁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중요한 요구조건이다. 실제로 1993년 이후 재정, 금융, 외환정책의 정상화 합리화를 조건으로 3~5년의 중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이는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를 맞아 IMF의 금융지원을 받으면서 수용해야 했던 구조개혁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베트남의 재정 및 금융개혁의 핵심은 먼저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IMF 금융지원이 시작되기 전부터 실시되었다.

재정 및 금융개혁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세출면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부담을 금융의 자원에 맡김으로써 분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는 금융이 재정에 종속되어 있는 바, 이는 중앙은행이 예금흡수와 대출결정에 있어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반면 국가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영기업에 자금을 투입할 뿐이기 때문이다. 개혁과정에서 금융부문은 이분화되어 거시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과 다수의 상업은행으로 재구성되었다. 또한 재정부문은 국가 보조금을 없애는 반면 농업세, 매출세, 이윤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을 신설하여 세입확대를 노렸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자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적자를 금융부문에서 화폐 팽창으로 보존하고 인플레이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차단하게 된다. 이같은 개혁은 바로 국제금융기구가 지원조건으로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사항들이다.

셋째, 국영기업 개혁은 국제금융기구의 요구사항인 동시에 AFTA 참여에 따른 대내적 조치사항의 일환이다. 베트남에서 개혁이전에는 국영기업이 이윤, 감가상각비, 자본사용료 등을 대부분 국가 재정에 귀속시키므로 재정 공급원이 되는 한편, 국가 재정을 공급받아 투자를 하므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있었다. 국영기업이 국가 목표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주요 재정 공급원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정적자를 누증시키는 요인이 된다. 베트남의 개혁 이전 상황은 바로 후자에 해당하였으며, 이 문제의 해결은 가격자유화 및 재정·금융개혁과 함께 국영기업의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목할 것은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이 급진적 민영화를 추구한 동구에서와는 달리 효율성에 초점을 둔 점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은 이른바 ‘점진주의적 이행전략’으로서 국영기업의 경제적 효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적으로 개혁함을 말하는데,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 속에서 국영기업 개혁이 이루어져왔다.⁶⁴⁾ 첫째, 재정부담이 되는 국영기업 보조금을 중단하고 경영자율권을 보장하였다. 둘째, 국영기업에 대한 직접 간섭과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소유권과 경영권을 분리하였다. 셋째, 리스트럭처링(restructuring)을 통해 만성적 적자상태인 국영기업을 정리하였다. 넷째, 국영기업의 주식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국가증권위원회(State Securities Commission)를 세우고 증권시장 개설을 준비중에 있다.

베트남이 점진주의적 국영기업 개혁을 추진하는 이유는 급격한 민영화로 인한 경제적 혼란과 침체를 피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IMF와 세계은행의 지원에 뒤따르는 이행조건과 대치되는 측면이 있는데, 베트남이 점진주의적 방식을 택하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1995년 이후 해외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일정부분 국제금융기구의 압력을 회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아시아 금융위기로 대베트남 투자와 지원이 감소한데다, AFTA 참여에 따른

64) 권을,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2000년 11월) 참조.

비관세 및 관세 보호 국영기업의 개혁조건, 최근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신용 등의 원조 프로그램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국영기업 개혁 요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하겠다.

라. 국제정치와의 역학관계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은 국제정치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사회주의 대변혁과 대미관계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추진되었다.

첫째, 사회주의 대변혁은 베트남이 서방 및 아시아 자본주의국가들에 대해 대외개방정책을 실시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이후 도이 모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베트남은 소련 및 CMEA에 의존하는 동시에 서방권의 자본을 유인하려는 과도적 전환을 시도하였다.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소련 연방의 해체와 이로 인한 원조의 완전중단은 베트남의 국제금융기구, FDI, ODA에 대한 의존도를 훨씬 높여주었다.

둘째, 1990년대 전반 미·베트남 관계의 진전으로 베트남의 대외경제개방은 비로소 실효를 거두게 되었다. 사회주의 대변혁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서방과 아시아의 신흥국가들을 향하게 했다면, 미·베트남의 관계 발전은 실질적인 자본의 유입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미국과 베트남은 10년에 걸친 전쟁, 전후 적대관계, 인도차이나 반도 전략을 둘러싼 캄보디아 문제, 미군실종자 문제, 미군유해송환 등으로 약 30년간 갈등관계에 있었다.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을 계기로 1992년과 1993년 경제제재 완화와 1994년 경제제재 전면해제로 미·베트남 관계는 중요한 진전을 보게 되었으며, 베트남 대외경제개방의 주된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었다. 이로써 베트남은 IMF, 세계은행, ADB

등의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미·베트남 관계가 베트남 대외개방의 성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은 1995년 양국간에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베트남이 ASEAN과 AFTA에 참여하게 것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FDI와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의 ODA도 국제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미국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들과 함께 베트남의 대외개방정책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민간차원의 경제교류도 국제정치의 영향하에 있었다. 1992년 12월 경제제재 1차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자 미국기업의 베트남 사무소 설치 및 현지인 고용, 사업타당성 조사, 사업계약 체결 등이 허용되었다. 또 1993년 8월 미국이 국제금융기구의 대베트남 지원을 허용하고 동년 9월 미국기업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제제재 2차 완화조치를 취함에 따라, 베트남의 경제개방은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였다. 마찬가지로 ODA도 이와 때를 같이하여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한가지 지적할 것은 미·베트남 관계의 진전에 따른 양국간 경제협력 발전은 지난(至難)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1989년 9월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로부터 일방적으로 철수한 후 관계정상화까지는 6년이 걸렸으며, 관계정상화 이후 무역협정을 체결하기까지 5년이란 세월이 소요되었다. 덧붙이자면,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이같은 진전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완전히 우연적 일치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북한에 주는 시사점

가. 경제의 자립성

베트남의 사례가 북한에 주는 함의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베트남 경제체계의 기본성격, 대외경제개방을 추진한 대상, 개혁과 개방 사이의 상호관계, 국제정치와의 역학관계들을 논의해 보았다. 베트남이 도이 모이를 계기로 추진한 대외경제정책의 환경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북한과의 유사점 및 상이점을 축출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베트남이 북한과 가장 큰 대조를 보이는 부분은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일 것인 바, 북한은 특유의 자립형의 경제체계를 유지시켜왔다.

북한은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걸쳐 대내외 정책이 골간이 되는 네 가지 자주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정치에서의 자주, 그리고 국방에서의 자위가 그것이다. 특히 경제에서의 자립은 김일성이 1956년 12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에 기반한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이후 북한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개념이자 구호가 되었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다른 세 가지 자주성의 원칙들과 함께 김일성이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의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한 연설을 계기로 이후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정책 대강(大綱)이 되었다. 북한이 이렇게 자주성을 강조한데는 중소분쟁과 함께 남북한 분단으로 인한 경쟁적 관계 때문이었다.

북한이 네 가지 자주성의 원칙, 특히 경제에서의 자립을 선언했다고 해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경제 모델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은 아니었다. 북한이 비록 자립경제를 선언했지만, 스탈린식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중공업 우선발전, 경공업·농업 동시발전’에서 잘 드러나는 바, 냉전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경제적 수혜와 협력이 사회주의권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자원인 원유가 없는 북한은 이것을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까지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유리한 가격으로 구소련으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베트남에 비해 북한의 사회주의권 의존도는 훨씬 낮기는 했지만, 베트남과 북한 모두 경제체계의 기본 모델에 있어서는 소비에트식을 따랐던 것이다.

북한의 자립적이고 단절적인 경제체계는 1970년대와 1980년대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몇 가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기본성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북한은 1970년대 초반 동서 대탕트 무드를 타고 서방권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수입하려 했으며 1980년대 초반 합영법을 채택하여 대외개방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한의 시도는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한과의 체제경쟁을 의식하는 상황 속에서 대내경제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으며 결국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다. 이는 적화통일 이후 정치체계 위기에 대한 불안감 없었던 베트남이 1980년대 중반 비효율성과 비효과성에 대한 자기성찰 속에서 과감히 도이 모이를 추진했던 것과 대조된다.

1980년대 베트남과 북한이 자신들 경제체계의 모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달랐던 만큼, 사회주의 대변혁에 의한 충격은 베트남과 북한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다. 도이 모이를 통해 이미 구조적 개혁을 서두르고 있었던 베트남으로서는 소련 및 CMEA의 원조중단에 대한 일정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었다. 베트남은 소련 원조로 개발한 유전과 농업우선 정책에 따른 쌀 증산과 수출로 원조중단의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장치를 가졌던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에너지자원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비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련과 중국으로부터의 경화 결제 요구를 감당해낼 수 없었다. 결국 1990년대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였다.

베트남과 북한이 사회주의권에 대한 의존도가 달랐기 때문에 사회주의 대변혁에 따른 대응방식은 달랐다.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만들어 서방권 자본수입을 준비해온 베트남은 소련과 CMEA로부터의 원조가 중단되자 곧바로 자본수입의 원천을 서방권과 아시아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 붕괴와 이에 따른 충격을 흡수하면서 대처할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경제위기를 이룬 바 ‘고난의 행군’으로 헤쳐왔다. 최근에 이르러서야 북한은 남북 정상 회담과 전방위 외교를 통해 남한과 서방의 자본수입을 추구하고 있다.

나. 대외경제개방의 대상

베트남이 대외경제개방 과정에서 다양한 제도를 통한 자본수입과 경제협력 대상을 강구해온 것과 달리, 북한은 정치적인 타협에 따른 보상과 협력 대상을 모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먼저 베트남은 FDI,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ODA 등 제도적인 방식뿐만 아니라 ASEAN과의 무역증대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왔다. 또한 2000년 7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함으로써 WTO 가입을 통한 세계경제로의 완전한 공식적 편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베트남의 다양한 접근방식은 프로그램화된, 즉 지원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대내개혁 이행 조건들을 수용한다는 지도부의 긍정적 인식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반면 북한은 제도를 통한 대외경제개방 보다는 남한과의 정치적 타결과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일방적 지원을 추구하고 있다. 또는 국제

금융기구를 통한 지원보다는 우선적으로 미국 및 일본과 양자적 관계발전을 통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베트남처럼 다양한 자본수입 대상을 찾아 대외경제 개방을 추진하기에는 아직 여건상 미흡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FDI를 유인하기에는 적절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1991년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를 설정하고 1992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이 지역에서의 FDI를 모색했으나 그 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투자유치 규모는 1998년 말까지 약 8,800만 달러에 그칠 뿐만 아니라 투자주체도 홍콩을 포함한 중국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방자본을 유치해 나진·선봉을 동북아 경제 및 무역 중심지로 건설하려던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중국의 훈춘·도문·연길 경제권의 배후지역으로 제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⁶⁵⁾ 최근 개성공단 건설과 남한 및 외국인투자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둘째, 북한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유인하기에는 미흡한 여건이다. IMF,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구의 금융지원에는 반드시 선행조건 또는 이행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IMF는 동구권에 금융지원을 해주면서 빅 벵식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왔다. 가격자유화, 재정과 금융의 분리,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이 그같은 조건으로서, 북한이 이를 수용하면서 개혁을 수행하기에는 경제체계의 성격이 지나치게 자립적이며 유연성이 부재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북한이 일정부분의 ODA를 유인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 일본 등 주변 미수교국들과 국교정상화

65) 오승렬, 『북한 나진·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 99-05) (서울: 통일연구원, 1999), p. 15.

를 맺어야 하며, ODA 진출에 따른 민간기업의 진출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흔히 자국의 민간기업이 각종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일본이 북한과 수교한다면 ODA의 제공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일본이 개도국에 ODA를 제공하면서 자국 민간기업의 참여적 개방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던 전례를 북한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남북한 경제협력의 규모와 질이 발전하고 북·일본 수교가 성공을 거둔다면, 동아시아 역내 무역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간 교역은 민족내부 거래로서 여타 국제무역과 성격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한반도를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이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개혁·개방의 상호관계

개혁과 개방이 상호작용함으로써 효과성과 안정성이 증진될 수 있기 때문에, 개혁과 개방을 두 수레바퀴에 비유하기도 한다. 실제로 대내 개혁없이 대외개방만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는 없다. 이는 사회주의 경제체계의 기본골격, 즉 중앙집중식 경제관리방식을 고수하면서 자본수입을 모색하려는 정책이 성공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북한의 대미, 대일, 대남 정책의 기저에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면서 자본수입을 모색하는 소극적 의미의 대외경제개방 의도가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북한의 접근방식은 이미 언급한 바 있는 경제체계의 기본성격 및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오랫동안 자립적이고 단절적인 체계를 유지해온 데다가 김일성·김정일 부자간 권력승계에 대한 정당화에 정치력을 집

중함에 따라 경제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논의와 노력을 집중할 수 없었다. 분단상황으로 인한 남북한 경쟁의식, 부자간 권위구조에 대한 정당화, 미국의 경제제재에 대한 피해의식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북한식 사회주의를 고집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 미국, 일본, 그리고 기타 서방권과의 경제협력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을 변화시킬 대상과 방식을 찾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대내경제의 구조적 개혁 가능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 북한이 고유의 자립형 경제체계를 유지해 오기는 했지만, 경제발전을 위한 자체의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남한과 해외로부터의 자본수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은, 즉 일부 개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베트남 사례에서 우리는 개혁의 심화(deepening of reform)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즉, 원조와 지원의 대상이 사회주의권에서 자본주의권으로 바뀔에 따라, 개혁의 심도가 달라지는 동시에 경제체계의 성격도 본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기 도이 모이를 추진할 당시 베트남은 소련 및 CMEA와의 국제적 분업에 기초하면서 동시에 서방권의 지원을 확보하려는 의도였는 바, 이는 곧 당시 추진 중이던 소련 및 동구의 개혁 모델에 상응하는 조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변혁으로 금융지원의 원천을 국제금융기구, 서방 및 아시아 국가에서 찾게 됨에 따라, 베트남의 개혁은 심화되어 가고 경제체계의 성격도 보다 시장경제에 근접하게 되었다. 물론 베트남은 동구의 급진적 개혁과는 달리 점진주의 전략을 취함으로써 개혁의 속도를 나름대로 조정하려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을 바로 민영화했던 동구와는 달리, 보조금을 없애고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

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같은 속도조절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혁의 심도는 초기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북한도 대외경제개방을 본격적으로 시도하게 된다면, 프로그램화된 개혁, 특히 IMF와 세계은행의 이행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이기는 하겠지만 개혁내용의 심화가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라. 국제정치와의 역학관계

국제정치적 환경과 관련하여, 베트남과 북한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베트남의 대외경제개방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는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 대미관계였는 바, 이는 북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대외경제개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서 대미관계의 중요성은 이미 미·베트남 관계에서 입증된 바 있다. 사회주의 대변혁으로 베트남의 대서방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가운데, 캄보디아 평화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미국은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 허용과 경제제재 해제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곧 AESAN이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일게 하고, FDI를 활성화하는데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

사회주의 대변혁을 계기로 북한은 과거 북방 삼각관계의 외교적 틀에서 벗어나, 중국·소련과 함께 미국을 또 다른 외교 중심체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북·미간에 핵 문제가 쟁점화되면서 양국간 직접 접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를 바탕으로 핵동결 대신에 경수로 건설을 약속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미사일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미사일 수출동결에 대한 대가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과 북한의 대미관계에서 보이는 차이점이 있다. 베트남의 경우, 관계정상화는 베트남군의 캄보디아 철군으로부터 6년, 그리고 무역협정은 관계정상화 후 5년 후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관계정상화와 무역협정 등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베트남의 경우보다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이미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을 실현 시킴으로써 양국간 주요 현안인 미사일관련 회담의 수준을 높여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미국의 차기 행정부로서는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새롭게 고민할 소지를 상당부분 덜어낸 셈이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관계의 진전 과정은 미·베트남 관계의 그것보다도 훨씬 축약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VII. 결 론

베트남은 북한과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을 비롯해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경제개방 방식에 있어서 북한에게 많은 함의를 준다. 먼저 베트남은 대외의존적 경제를 유지해왔다는 점이 북한이 일찍이 자립적 경제를 강화시켜 왔다는 점과 대조된다. 그러나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모두 지구적 차원의 변화에 대해서 자유로울 정도의 규모의 경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이는 사회주의 대변혁과 같은 세기적 변화로부터 베트남과 북한이 모두 커다란 충격을 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입증된다. 또한 베트남이나 북한이나 모두 미국과 관계개선 없이 대외경제관계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베트남은 대미관계 현안인 캄보디아 문제를 해결한 후에 비로소 해외 및 국제금융기구의 자본수입을 개시할 수 있었으며, 북한은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준비단계에 놓여있다.

베트남의 사례에 비추어 보건대, 북한의 대외경제개방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북한은 대외개방이 대내경제에 미치는 파급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추진해 나갈 것인 바, 이는 곧 개혁·개방의 상호작용에 따른 연계효과를 일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개방 유형이 될 것임을 뜻한다. 북한 지도부는 워낙 오랫동안 자립적 경제체계에 익숙해 있는데다가,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외부와 단절을 북한식 사회주의의 존속원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북한의 경제체계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국제금융기구 특히 IMF의 급진적 개혁요구를 수용할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구들의 금융지원을 전

면적으로 받을 수 없는 까닭에, 북한 지도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대외 경제개방 효과는 단기간 내에 성취하기 힘들 것이다.

둘째, 북한은 미국 및 일본 등 개별국가와의 현안문제 접근 및 국교정상화를 통해 보상 또는 ODA를 유인하는 대외개방 방식에 주로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민간차원의 직접투자를 유인하려는 북한의 노력이 아직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ODA는 매우 유효한 자본수입의 원천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ODA를 제공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민간기업들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진행과정에서 북한과 이들 국가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자체의 자본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대외개방이 일단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점진적이거나 자본수입 규모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인식은 지도부가 의도하지 않은, 즉 개혁 프로그램을 요구하는 IMF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가격자유화, 재정 및 금융의 분리, 공기업 개혁 등 시장경제 요소의 도입을 의미한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북한은 경제체계의 기본성격상 베트남보다도 초기에는 대외경제개방의 심도와 속도가 훨씬 낮고 느리겠지만, 점차 개방의 효과를 체감하면서 또는 개방의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점진적으로 심도와 속도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혁과 개방이 상호작용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연계효과에 대한 기대 때문일 것이며, 또한 실제로 개방의 효과적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지름길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국문 문헌>

- 구성렬 외. 『베트남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 (서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5).
- 권경희. “베트남·미국 관계정상화 과정에 관한 연구: 1975-1995,” 『국제정치논총』, 36집 1호 (1996).
- 권순만·김난도. “주인·대리인 모형,” 정용덕 외, 『합리적 선택과 신제도주의』 (서울: 대영문화사, 1999).
- 권 율. “국제금융기관의 대베트남 지원체계와 방향,” 『지역경제』 (1994년 10월).
- _____. “미·베트남 관계와 베트남의 WTO 가입 전망,” 『지역경제』 (1999년 10월).
- _____. “베트남 경제의 구조전환과 투입산출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 (1999년 가을호).
- _____. “베트남 국영기업의 개혁과정에 관한 연구,” 『베트남연구』 (2000년 11월).
- _____. 『베트남 국유기업 개혁의 현황과 과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김기수. “국제정치경제 시각에서 본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가능성,” 양운철 편,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러시아, 동유럽, 북한』 (성남: 세종연구소, 1999).
- 김병로. “통일 이후 베트남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 남북나눔운동 편, 『통일된 베트남을 가다』 (서울: 남북나눔운동, 1997).

-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김성한. “미·베트남 수교 과정과 북·미 수교에 대한 시사점,” 『통일경제』 (1996년 8월).
- 남궁영.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의 비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 박변순.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삼성세계경제』 (1994년 3월).
- 박영호. “아시아 외환위기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실적 비교 및 평가,” 『세계경제』 (2000년 2월).
- 박종철. “베트남의 도이 모이 이후 사회적 갈등과 방어적 시민사회,” 『사회과학』, 36권 1호 (1997).
- _____.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경제개혁: 사회주의 발전 전략으로부터 아시아 사회주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고우성 외, 『동남아의 정치경제: 산업화와 발전전략』 (서울: 21세기한국연구재단, 1995).
- 베트남 경제연구소 편. 『베트남 투자가이드』 (서울: 아시아개발연구원, 1995).
- 서재진 외 5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안승욱.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과 특성,” 강태훈 외,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 안희환. “베트남 수출가공구·공단 현황과 발전 전망,” 『통일경제』 (1995년 12월).
- 양승윤. “베트남의 팽창주의와 아세안,” 강태훈 외,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 오승렬. 『북한 나진·선봉지대 현황 및 ‘지대’정책 전망』 (통일정세분석 99-05)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오인식. 『베트남의 투자환경분석과 기업진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1997).
- 윤덕룡. “베트남의 경제통합과 체제개혁,” 남북나눔운동 편, 『통일된 베트남을 가다』 (서울: 남북나눔운동, 1997).
- 윤영관. 『전환기 국제정치경제와 한국』 (서울: 민음사, 1999).
- 이교덕. 『미국의 대중·대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 비교: 북·미관계 개선에 대한 함의』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삼성. 『미국외교이념과 베트남전쟁』 (서울: 법문사, 1991).
- 이수훈. “베트남 발전노선에 관한 연구,” 『한국과 국제정치』, 10권 2호 (1994년 가을·겨울).
- 이창재·권율·안응호. 『공적자금의 연계를 통한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 정재완. 『한국의 대베트남 투자 및 ODA 추진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 최청호. “캄푸치아분쟁의 원인과 경과,” 강태훈 외, 『베트남의 정치경제와 국제관계』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7).

<영문 문헌>

- Ahearn, Raymond J. and Robert G. Sutter, "Vietnam-U.S. Normalization: Considerations for 1993," *CRS Report for Congres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ibrary of Congress, March 23, 1993).

- Babson, Bradley O., "Integrating North Korea with the World Economy: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Private Capital," in Proceeding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Korean Summit and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Structure*, New Millennium Hall,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4-5, 2000).
- Canh, Nguyen Van, *Vietnam under Communism, 1975-1982* (Stanford: Hoover Institution Press, 1983).
- Chanda, Nayan, "Back to Basics: Vietnam's leaders admit their policies have faile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3, 1986).
- Dollar, David, "The Transformation of Vietnam's Economy: Sustaining Growth in the 21th Century," in Jennie I. Litvack and Dennis A. Rondinelli, eds., *Market Reform in Vietnam: Building Institutions for Development* (Westport, Connecticut: Quorum Books, 1999).
- Forster, Neal, "Vietnam and the ASEAN Free Trade Area,"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No. 8 (Winter 1996).
- Griffin, Keith, ed., *Economic Reform in Vietnam*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8).
- Hiebert, Murray, *Chasing the Tigers: A Portrait of the New Vietnam* (New York: Kodansha International, 1996).
- Holmes, Leslie, *The End of Communist Power: Anti-Corruption Campaigns and Legitimation Crisis* (Cambridge: Polity Press, 1993).

- Imada, Pearl and Seiji Naya, *AFTA: The Way Ahead*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2).
- Koo, Bon-Hak, *Political Economy of Self-Reliance: Juch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1961-1990* (Seoul: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92).
- Martin, Kazi and Duc Minh Pham, "Vietnam Trade Liberalization: Following the AFTA Program,"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No. 22 (Summer 2000).
-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A Guide to Foreign Investors in Vietnam* (Hano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ay 2000).
- Murano, Tsutomu and Ikuo Takeuchi, eds., *Indochina Economic Reconstruc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kyo: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1992).
- Porter, Gareth, *Vietnam: The Politics of Bureaucratic Soci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 Poverty Reduction and Economic Management Unit,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Vietnam: Deepening Reform for Growth* (Report No. 17031-VN, 1997).
- Sidel, Mark, "Vietnam in 1998: Reform Confronts the Regional Crisis," *Asian Survey*, Vol. 39, No. 1 (January/February, 1999).
- Thien, Tran Dinh, "Impact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on Vietnam's Economy,"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No. 22 (Summer 2000).

- Tri, Vo Nhan, *Vietnam's Economic Policy since 1975*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0).
- Tribugenko, M., "Cooperation between CMEA and Vietnam: Checking the Slow Down," *Far Eastern Affairs*, No. 4 (1988).
- World Bank, Country Operations Division, *Viet Nam: Transitions to the Market* (September, 1993).
- Yampolsky, A., "USSR-Vietnam: Improvement of Trade and Economic Ties," *Foreign Trade*, No. 5 (1988).
- Yuen, Ng Chee, Nick J. Freeman, and Frank H. Huynh, eds., *State-Owned Enterprise Reform in Vietnam: Lessons from A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96).
- Zagoria, Donald S., "Joining ASEAN," in James W. Morley and Masashi Nishihara, eds., *Vietnam Joins the World* (Armonk, New York: M. E. Sharpe, 1997).

<일반 잡지>

- The Economist* (December 12, 1987).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10, 1988).
- Sales & Marketing Management*, Vol. 147 (April 1994).
- U.S. Department of State Dispatch*, Vol. 6 (October 16, 1995).

<기타>

『조선일보』 (2000.7.14).

구엔 반 쑤옹(Nguyen Van Xuong) 주한 베트남 대사 인터뷰 (통일
연구원 세미나. 2000. 2. 22).

<http://www.imf.org/external/np/sec/decdo/asean.htm>.